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년 제2차 연구과제 발표회 및 네트워크 공동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일 시 : 2021년 **12월 13일**(월) 15:00~17:30

장 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중회의실 (2층)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서귀포 YWCA



제주여민회



제주 YWCA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 일 시 : 2021. 12. 13(월). 15:00~17:30
- 장 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중회의실(2층)
- 주 최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서귀포YWCA·제주여민회·제주YWCA

세부 프로그램

등 록	14:30~15:00	《등록 및 안내》
개회식	15:00~15:10	사회: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개 회 인사말: 민무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축 사: 좌남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토론회	15:10~16:00 (50')	공동 발표 및 정책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정은숙(제주여민회 정책위원장) - 양금선(제주YWCA 통합상담소 소장)
	16:00~17:00 (60')	좌장: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학장) 토 론 -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홍부경(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 김현주(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수놓음돌봄활동가) - 진관훈(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 강성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7:00~17:30	《전체 토론 및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내년 민선8기 새로운 도정의 출범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연구과제 발표회 및 네트워크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Gender Equality)을 새로운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거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민선7기 제주도정의 양성평등정책 총괄 추진체계는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사례로서,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은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단체(활동가)와 도정의 성평등 전문 행정가 그리고 여성가족연구기관과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협업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 또한 서귀포YWCA, 제주여민회, 제주YWCA 등 지역 여성단체와의 협업의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큼니다. 특히, 정책 개발에 참여하신 서귀포YWCA 이신선 사무총장님, 제주여민회 정은숙 정책위원장님, 제주YWCA 통합상담소 양금선 소장님,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염미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민선8기 양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성평등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성평등 관련 의제를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는 평소 성평등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님과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학장이신 김엘림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빛내주실 여러 분이 계십니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 공공정책센터장님,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홍부경 회장님,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수놓음 돌봄활동가 김현주선생님, 제주테크노파크 진관훈 수석연구원님, 연말이라 분주한 중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회 취지에 같은 뜻을 가지고 동참해주신 서귀포YWCA, 제주여민회, 제주YWCA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숙



축 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제안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을 드립니다.

함께 행사를 준비해주신 제주여민회 · 제주YWCA · 서귀포YWCA를 비롯하여 토론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정책은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설립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중심으로 제도와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은 정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역과 사회, 행정이 함께 양성평등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 위축, 돌봄부담 가중 등을 야기하며 어렵게 가꿔온 양성평등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존엄성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때 사회적 성숙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펼쳐나갈 양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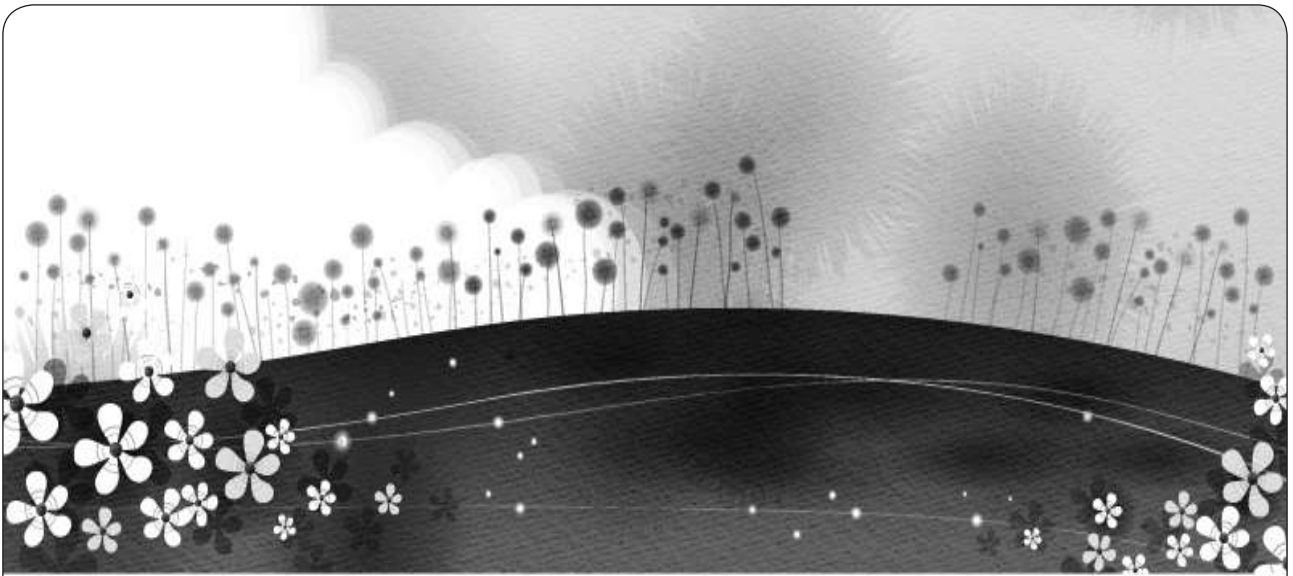
여러분이 모아주신 지혜는 제주도정이 펼칠 양성평등 정책 방향에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 수고해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행복이 가득한 연말 연시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 강경숙(제주여성가족구원 연구위원)
- 정은숙(제주여민회 정책위원장)
- 양금선(제주YWCA 통합상담소 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연구 개요>

- 연구과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 과제 유형 : 기본과제
- 추진 기간 : 2021. 6월 ~ 11월
- 연 구 진
 - 강경숙(연구책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연화(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이화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양금선(제주YWCA 통합상담소 소장)
 - 염미경(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이신선(서귀포YWCA 사무총장)
 - 정은숙(제주여민회 정책위원장)

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그동안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정책¹⁾은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은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추진되거나 중앙의 시책 시달 사항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음(김혜정 외, 2018; 장윤선 외, 2019).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중장기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시책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 여성정책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정책(여성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인 'Gender Equality(젠더평등)'를 의미함. 궁극적인 의미는 생물학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나 제도로써 젠더 관계의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임. 한국의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인지 성평등정책인지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계획의 시행 및 제주도의 특성화된 정책 계획 마련을 위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차~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왔음 (고지영 외, 2014)

- 아울러 민선6기인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되고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 지역에 특화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년~2018년)」이 추진되기에 이룸 (제주특별자치도, 2015). 또한 민선7기에는 「더제주처럼(2019년~2022년)」을 연이어 추진 중에 있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2017년, 민선7기 제주도정의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 과 「더제주처럼(2019년~2022년)」²⁾ 프로젝트의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를 추진하였으며(제주특별자치도, 2019), 그 결과 다수의 제안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음. 대표적인 정책 반영 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총괄 추진체계인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18.8월)과 ‘제주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사업(‘20.9월) 등이 있음
- 올해는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추진기반 및 주요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지난 3년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내용

가.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민선7기(2018. 7월) 이후부터 민선8기(2022~2026)까지임
- 민선7기 기간 중 출범시기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지난 3년간의 양성평등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은 민선8기 출범부터 임기 종료시기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6기인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되고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 지역에 특화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년~2018년)」을 추진하였고, 민선7기에는 「더제주처럼(2019년~2022년)」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음

□ 공간적 범위 및 정책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계선조직(보조기관)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참모조직(보좌기관)인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이 병합된 형태³⁾로, 양 조직에서 추진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정책 영역 분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제주처럼’(2019~2022)」과 연동하여, 다음과 같은 4개 영역⁴⁾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영역 분류 기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분야 및 대과제	「더제주처럼(2019~2022)」 정책 영역	본 연구의 정책 영역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여성대표성)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여성 대표성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여성친화환경 조성	안전, 인권, 건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 돌봄, 일·생활균형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일자리 활성화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3) 장윤선 외(2019)의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모델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계선조직(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과 참모조직(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이 혼합된 형태라고 분석함. 정부조직법상으로는 계선조직은 보조기관, 참모조직은 보좌기관에 해당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좌기관은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 법무특보, 대외협력특보, 정무특보가 있으며, 행정부지사 직속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정부부지사 직속 공보관이 있으며, 보조기관은 기획조정실 등 실국을 의미함(「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4)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연구(2017,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정책 영역을 ‘돌봄과 여성가족복지’, ‘여성일자리’, ‘성인지역량’ 3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안전, 인권’ 분야의 정책 발굴이 취약했다는 한계가 있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전, 인권, 건강’ 영역을 별도로 구성, 총 4개 정책영역으로 확대·구성함

나. 연구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배경 및 변화
 -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디임의 변화
 - 한국사회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방향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 법적 기반 및 예산 규모
 - 추진체계(추진부서 및 인력, 협의 조정 기구, 거버넌스 등)
 - 협력 기관(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 정책영역별 추진 성과와 과제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여성 안전·인권·건강
 - 가족·돌봄·일·생활 균형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 정책영역별 추진기반 구축·운영 성과 및 개선 과제
 - 정책영역별 주요사업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 양성평등 전략 및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3. 연구 방법과 절차

가.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양성평등정책 분야 선행 연구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자료 분석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더제주처럼」, 통계자료 등)
-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2019)」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2020)」의 도민·공무원 정책 수요 자료 분석 및 활용

☐ 전문가 및 관계자 FGI

- 조사대상 : 정책 영역별 민·관·학·의·화·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전문가 및 관계자
 - 영역 1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영역 2 : 여성 안전·인권·건강
 - 영역 3 : 가족·돌봄·일·생활 균형
 - 영역 4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조사내용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전반 및 영역별 정책성과
평가, 민선8기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타지역 조사

- 조사대상 : 대전, 대구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개선지역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 ※ 대전과 대구는 민선7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한 지역⁵⁾으로, 제주도가 참
모형 조직 또는 계선형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할 시 각 조직 형
태의 장단점 및 고려 사항 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에 타지역 사례 조사지로
선정함

5) 대전광역시는 민선7기에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개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획조정실 라인으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대구광역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로 참모형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곳이었으나(여성가족정책관) 담당 부서의 위상을 높이고 의사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과 단위조직을 국 단위로, 부서장의 직급은 4급에서 3급으로 격상된 지역임(장운선 외, 2019)

- 조사내용 : 해당지역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제주지역 시사점 등
- 조사방법 : 서면조사(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2회)

- 연구 설계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나. 연구 절차

- 연구수행 절차는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수행 계획 마련 및 착수 보고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2단계	정책 환경 및 성과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배경 및 변화 분석 • 민선7기 정책성과 평가(주요 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3단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영역별 도내 전문가 및 관계자 FGI를 통한 의견 수렴 (7회, 37명) • 대구, 대전 등 타지역 관계자 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5명)
4단계	민선8기 정책방향 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한 관계 공무원 의견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방향 수립 및 과제 도출
5단계	결과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작성 및 최종 보고

2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배경 및 변화

1.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은 1970년대 ‘여성과 발전’(WID : Women in Development), 1980년대 ‘젠더와 발전’(GAD : Gender and Development), 1990년대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으로 변화하였음
-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은 ‘젠더와 발전’(GAD) 관점을 확대·발전시킨 개념으로,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성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음
- 같은 맥락에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성평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로 선언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2. 한국사회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한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은 여성운동과 국제사회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음. 1980년대부터 여성단체 활동이 두드러진 시작하였고, 1980년 후반부터 고용과 가족, 섹슈얼리티 등 많은 법적, 제도적 변화가 나타남. 한국의 양성평등정책은 과거 소외계층 여성과 일부 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녀행정’의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1980년 초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됨
-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본격적인 여성정책 업무가 추진됨.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정책에서 성 주류화 전략을 반영한 양성평등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였음을 명문화함
- 2001년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의 출범에 따라, 한국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가 구축·강화되고 여성정책의 범위가 일반정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 여성부는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2005년 여성가족부, 2008년 여성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청소년, 가족업무 포함)로 존재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중앙부처⁶⁾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해당 부처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부처 내 양성평등 정책 기획 및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3.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은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흐름과 함께 변화해왔으며, 아울러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변화와 연동하여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해왔음
- 지방자치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선1기~3기(1995~2006)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은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임. 1996년 최초로 여성정책과가 만들어졌으며, 2000년에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함. 여성특별위원회는 당시 제주지역에 여성가족 관련 연구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과 여성역사문화 관련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제주여성사와 관련된 기초 연구의 토대를 강화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민선4기~5기(2006~2014)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연동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한 시기임. 특히, 민선4기(2006.7월~2010.6월)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출발하면서 행정체계, 연구기관, 관련 법령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남. 당시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정책 요구도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기조는 민선5기 까지 이어짐
- 민선7기는 민선6기 도정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양성평등정책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제주지역에 특화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년~2018년)」과 「더/제주처럼(2019~2022)」이 추진되었고,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17년)'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2020년)' 등 성평등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감. 이

6)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임

러한 흐름은 민선7기 성평등정책관 신설로 이어졌고,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의 전략으로 ‘여성·가족친화’영역을 최초 반영하는 성과를 도출함. 이러한 과정은 제주지역의 독립적인 여성가족 연구기관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2014.3월)과 민선6기에 이은 7기 도정의 성평등 전문 행정가 그리고 소수이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적인 여성단체 및 활동가와의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4. 소결 및 시사점

- 국내·외적으로 여성정책은 성평등(Gender Equality) 실현을 목적으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을 정책 도구로 채택하여 실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편, 성평등정책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반발도 지속되고 있음. 특히,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가족부 및 여성할당제 폐지, 역 성차별의 논란 속에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성평등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의 전략과 정책과제 개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하겠음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성과는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단체(활동가)와 도정의 성평등 전문 행정가 그리고 여성가족연구기관의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다양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방향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장.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 법적 기반 및 예산

○ 법적 기반

- 한국의 양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제주지역의 양성평등 정책의 법적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⁷⁾
- 이 외에 성별영향평가조례(성평등정책관), 성인지예산조례(예산담당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성평등정책관) 등 성 주류화 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⁸⁾ 여성권의 및 젠더폭력 그리고 가족, 보육, 아동, 청소년 관련하여 다수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예산

- 민선7기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의 변화가 일어난 도본청의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0.35% 수준으로 조직체계 변화에 비해 예산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단일 행정체제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시 예산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예산을 살펴보면, 도전체 예산의 5.7%로 도본청 보다 양 행정시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까지 포함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라고 할 수 있음⁹⁾ 또한 정책영역별로 보면 ‘성평등 및 여성권의’ 0.17%, ‘청소년’ 0.3%, ‘가

7)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4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으며, 2020년 1월 13일 전부개정이 이루어짐. 이를 통해 상위법령의 주요 조항들이 반영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이 구축됨

8)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성별영향평가조례(‘18.10.11)와 성인지예산조례(‘21.4.14)가 모두 마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경우 지방의회 최초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2019.7.10.)하였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성인지예산조례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임. 이런 점에서 제주도정의 성평등 정책은 도정을 넘어 도의회 및 교육청 등 지역사회의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9) 2019년 기준, 타 지역의 경우 보육업무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우 전체예산의 7~1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장윤선 외, 2019). 2019년 시도별 여성·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0.5% 이하인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제주도), 0.5%~1% 이하인 지역(부산, 대구, 대전), 1%~10% 이하인 지역(울산, 강원

족 0.32%, '보육, 아동, 어린이' 4.9% 순으로 나타나, 성평등 및 여성, 가족정책의 예산은 매우 적은 반면 대부분이 보육, 아동, 어린이 관련 정책 예산으로 나타남

□ 추진체계

○ 담당조직 및 인력

- 2018년 8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기존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에 있던 양성평등 정책 기획과 성 주류화 전략 정책 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 강화됨. 그 결과 계선조직(보조기관)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참모조직(보좌기관)인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이 병합된 형태로 이원화된 추진체계가 구축됨. 이처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 실행력이 강화되었음
- 한편, 기존 여성가족정책의 담당 조직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개편됨에 따라 청소년, 아동, 보육 등 돌봄 관련 업무가 확대(기존 복지청소년과 업무)되었으나, 여성 일자리 정책을 담당했던 여성능력개발팀이 폐지되는 등 사실상 여성을 위한 정책은 축소됨
- 요컨대, 민선7기 제주도정의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은 큰 변화가 있었지만 담당 인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성평등·가족정책 전체 인력의 변화 없이 기존의 여성가족과 인력이 성평등정책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여성권익과 가족정책 인력이 축소됨에 따른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협의조정기구 및 젠더거버넌스

- 양성평등 정책 관련 협의 조정 기구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음.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임.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2018년 4월)부터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권고제'를 시행하고 분과위원회(성평등정책분과,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여성및가족친화분과)를 운영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0%~11%인 지역(광주, 세종, 경남)으로 나타남.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일 행정체제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시 예산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젠더거버넌스 사업으로는 제주도내 2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성평등협의회는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교육청, 경찰청, 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0년부터는 공동으로 성평등 포럼을 개최하는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음

○ 연구기관 및 여성단체

- 제주지역의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은 2014년에 출범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¹⁰⁾이 있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사업 이외에도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음. 지자체 수탁기관으로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16년~)’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2020년~)’를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2021년 7월 기준, 총 16개이며 소속 회원 수는 12,950명임. 제주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는 적지 않으나,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성 주류화 관련 활동을 주요하게 추진하는 기관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그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서귀포YWCA 등의 단체 소속 활동가 및 회원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성 주류화 관련 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강경숙·이해웅, 2018)

2. 양성평등정책 영역별 추진 성과와 과제

□ 성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영역은 민선7기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전문 인력 충원¹¹⁾ 등 추진체계 강화에 따라 많은 정책적 시도와 성과를 도출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정책 전국단위 우수 평가를 받고 2019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먼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제주처럼(2019~2022)」 기획 및 추진, 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 실행력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제’, ‘부서별 양성

10) 2005년 5월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 내에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연구 인력이나 예산이 매우 열악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2013.9.25)」가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14년 3월 재단법인 형태 독립된 여성정책연구 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출범함

11) 성평등정책관과 성인지정책팀장은 개방형 직위임

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등 성 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기반이 강화되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관광 콘텐츠 및 축제, 홍보물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지속 추진하는 등 성 주류화 정책을 다각화하여 추진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 권고' 기능을 강화 하였고 제주도내 2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음
- 아울러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정책 중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지자체 최초 지역 차원에서 양성평등교육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성평등교육의 체계화와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음.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도지사 공역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20년 9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향후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강화를 위해서, 성평등정책관의 위상 강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기능 강화,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한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됨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증진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증진 정책 영역은 성평등정책관 신설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여성친화도시팀) 및 인력 등 추진기반을 확보하였고, 성인지적 안전 및 젠더폭력 관련 사업이 강화되었음. 전담부서 구성 이후 기존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여성친화도시 업무 추진에서 '협의체 및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시설 및 조성사업 발굴', '컨설팅 및 교육, 홍보' 사업 등 구체적이고 다각화된 업무를 추진하게 됨
- 또한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여성폭력 상담소 및 시설 등의 긴급대응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2020년),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설치(2019년),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2021년),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운영(2021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2021)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확대되었음. 특히 도 특화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도민대상의 폭력예방교육사업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성평등 인식강화를 위한 고충상담원 교육 및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등은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여성들의 생활안전 환경 제고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셉테드)사업,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확대,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 사업 등 여성 안전 분야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및 여성장애인 임신과 출산의 지원 사업 등 사각지대 대상의 성인지적 건강 증진 사업이 지속 운영하였으며, 여성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힐링공간 설립 및 운영사업을 기획 중에 있음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증진 정책 영역의 개선 과제로는 우선 성평등정책관(여성친화도시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여성권익팀) 양 조직에 업무가 분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주도 전반적인 여성친화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기획 강화, 코로나19와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및 성인지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그리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생애주기별 사업과 제주여성힐링공간 설치 및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 민선7기의 가족정책은 민선6기에 이어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지역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아우름으로써 가족정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음. 민선7기의 가족영역의 사업들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자립지원사업, 돌봄 및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문화 확산 관련 사업, 출산장려금 및 둘째아 양육수당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청소년 안전한 생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등이 계획·추진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자녀돌봄 서비스는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 및 육성’, ‘아동지원 서비스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추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제고’,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확대’,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이행 지원확대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비 지원 및 도민홍보 추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 확산을 위하여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사업 운영, 남성공무원 휴직업무대행자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및 업무대행수당을 지급 등 근로자의 모·부성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가족친화 인증제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경영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사업 등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은 종합적인 목표나 실행계획 없이 업무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강함에 따라, 향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추진동력으로서 가족정책 담당기구 구축·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가족을 위한 독립된 가족정책 설계와 가족 다양성의 포용으로의 정책 강화 및 성평등 및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지원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
- 아울러 가족구성원 개인의 생애 전 과정을 반영한 사회적 돌봄을 발굴·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제주도내 전체 사업체의 93.4%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로 이들 사업체가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을 확대해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육아부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 기업주와 남성대상 일·생활균형과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함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등의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자체의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내에 여성 일자리 정책, 정부의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내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로드맵,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주 일자리로드맵에 포함된 여성 일자리 과제는 ‘맞춤형 일자리 과제’의 세부과제로 1개 과제가 포함되는 것에 그쳐, 제주 일자리정책 로드맵 내의 성별 일자리 성과 파악 한계 및 여성일자리 대책 미약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시행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 중 4개 정책과제 분야와 연계하여 49개 과제(33,095백만원)를 제출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방식·영역 대응을 위한 여성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한 예로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인 “제주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민선6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프로젝트인 「제주처럼」의 일환으로 2016년 처음 시작되었고 2021년 현재까지 총 2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 이는 제주형 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과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여성 창업 지원 등의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책 수립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민선8기에는 도 전반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의 성 주류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어 정책 기획, 추진, 관리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팀과 전담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전면 개정안이 국회통과(2021.11.11.)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주지역의 대응이 필요하며, 제주의 산업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그 특징을 반영한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전략과 시책 개발이 필요함

3. 소결 및 시사점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는 성 주류화 전략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및 시책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임.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반해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큰 변화가 없으며, 여성인권 관련 업무의 이원화, 여성 일자리 등 여성을 위한 정책의 축소 등의 문제가 나타남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에 있음. 2018년 8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기존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에 있던 양성평등 정책 기획과 성 주류화 전략 정책 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강화됨. 이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 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및 연구가 강화되었으며, 부서별 양성평등담당 관제 운영, 주요 정책의 사전 성인지 검토제 실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등 지역 차원의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관의 조직 위상이 낮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더 중요한 사실은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구성이 기존 여성가족과의

여성권익 및 가족정책 관련 인력과 업무의 축소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점임.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조직체계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우선, 이원화된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성평등정책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기능 강화(조직 위상, 인력, 예산 등) 및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4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 본 의견조사는 제주 도내·외 행정, 학계, NGO, 의회, 언론 등 다양한 영역의 양성평등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의 양성평등정책 참여 경험 및 인식을 통하여,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민선8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이루어짐
- 조사방법은 크게 도내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타지역¹²⁾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 서면의견조사 2가지로 이루어짐

〈표 2〉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구분		내용
① 도내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조사 목적 및 내용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성과 분석 및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과제 개발
	조사 대상	- 도내 공공기관, 학계, NGO, 의회, 언론 등 영역의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37명
	조사 기간	- 2021.9.24.~ 9.30
	조사 방법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등에서 집단 면접 실시(7회)
② 타지역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조사 목적 및 내용	- 각 지역 민선7기 양성평등 정책 사례 조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과제 개발
	조사 대상	- 대구 및 대전 지역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5명 (대전지역 3인, 대구지역 2인)
	조사 기간	- 2021.10.19. ~ 10.25
	조사 방법	- 개방형 질적 질문으로 구성하여 서면 조사 실시

12) 대전과 대구는 민선7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한 지역으로, 제주도가 참모형 조직 또는 개선형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할 시 각 조직 형태의 장단점 및 고려 사항 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에 타 지역 사례 조사지로 선정함. 대전광역시시는 민선7기에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개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획조정실 라인으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대구광역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로 참모형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곳이었으나(여성가족정책관) 담당 부서의 위상을 높이고 의사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과 단위조직을 국 단위로, 부서장의 직급은 4급에서 3급으로 격상된 지역임(장윤선 외, 2019)

2. 제주지역 조사 결과

□ 성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과제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조직체계는 운영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 모두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참여자들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의 개편과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음. 조직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실국' 신설 또는 성평등정책관의 위상 강화 등이 제시됨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의 목적 및 역할 등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단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젠더거버넌스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연구 및 문화 관련 기관의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통합적 수립·운영이 필요함

○ 성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의 개선 과제

- 제주지역의 가부장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평등교육문화 진흥 체계 및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같은 맥락에서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접하는 지역의 가부장제 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민 체감형 성평등 아젠다 형성과 이를 위한 다양한 민관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함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과제

-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공무원 전달체계가 이원화된 느낌이며, 성평등정책관의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위상 강화가 필요함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정책의 개선 과제

- 여성인권 의식 향상 및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개선 및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등 여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강화(장애인, 이주여성 등) 및 홍보 확대가 필요함
-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등) 중심에서 일반 여성 전체를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범죄로부터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자연적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여성안전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1인 가구 여성 또는 농어촌 지역 등 취약계층 여성 안전 시설 강화가 필요함

□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과제

- 실질적인 가족정책, 특히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 개발이 미약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량에 따라 가족 지원 사업들을 운영해왔음. 따라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지역 기반 가족정책 개발과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함
-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2021년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센터로 개편한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과중으로 인한 조직 개편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아동청소년국 신설 또는 여성과 가족을 포함하는 성평등국 신설 등 조직 위상 강화가 필요함

○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정책의 개선 과제

- 가족정책 전담부서와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며, '가족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로 '사회적가족지원조례'(가칭)가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으로 가족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가족센터'의 제도적·정책적 통합과 지역 기반 체계적 운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영세기업, 자영업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과 대체인력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가족과 돌봄 관련 지역협의체(마을 주민의 돌봄협의체) 및 도와 교육청의 협력기반 구축 강화가 필요함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과제

- 별도의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부서 없이 사업 담당 인력 1명이 여성 고용, 일자리, 여성 인력개발, 여성단체 지원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필요함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정책의 개선 과제

- “여성 공동체 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제주형 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과이나, 제주도만의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이 미약하여 향후 제주 특성을 반영한 여성 일자리정책 개발이 필요함
- 디지털, IT 등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타파, 여성 미진출 분야의 진입 지원 필요함. 이를 위해 디지털 사회, 미래 사회 대응한 여성 전문가 양성 교육 필요하며, 공간, 마케팅,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여성 창업, 여성 기업 지원 정책과 여성 고용 장려를 위한 제도, 기업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 직업훈련 기관 지원 강화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 타지역 조사 결과 :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 개선 방안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인 지방정부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며, 향후 지속발전을 위한 조직 위상과 여성들의 참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성평등)과 가족을 통합하여 실국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으며 특히 성주류화 정책이 주요부서가 되는 것이 중요함
- 양성평등담당관제의 내실화를 위해 부서장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 필요함

○ 도정 및 지역사회 성평등 확산

- 도정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중요함
- 지역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발굴·지원이 선행

되어야 하며, 양성평등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제주지역 특화 정책 제안

- 제주여성문화유산 계승 및 보존 사업 강화 및 확산이 필요함
- 성인지적 관광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안전 관광 정책 개발이 필요함

4. 소결 및 시사점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성평등정책관·여성가족청소년과, 양성평등담당관제, 양성평등위원회 등)는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성 주류화 전략 확산을 위한 성평등정책관 조직 위상 미약, 여성 안전과 인권 업무의 이원화(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조직의 부재, 가족과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의 담당 조직 위상 미약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도·내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제주지역과 타지역 전문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전문가의 경우 2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모두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첫째,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을 ‘실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둘째,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를 크게 여성(성평등)과 가족으로 분리하고 각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그것임
 - 타지역 전문가의 경우, 제주지역의 성평등정책관 신설에 대해 더욱 많은 의미를 부여 하면서 성평등정책관의 안착과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였음. 그리고 여성(성평등)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합하여 실국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성 주류화 전략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전제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음
-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 구성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함

5장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과제

1. 여건 변화 전망

가. 종합 전망

- 첫째, 성평등 인식에 있어 성별, 세대별, 출신 지역 등 인식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소통 강화 및 정책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
 - 최근 성폭력 피해에 대항하는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 그리고 젠더 갈등의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고, 이와 같은 성평등 인식 차이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젠더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제주 지역의 성평등 인식에 있어서 남녀 도민 모두 제주사회가 성불평등하다는 인식이 67.0%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통 및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성별, 세대별 파트너십 강화 등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제주도민 67.0% ‘제주사회는 성평등하지 않다’고 응답(여성 80.4%, 남성 53.3%) (「제주도민이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2019)
 - 또한 내년 대선과 민선8기 제주도정의 출범을 앞두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 정책과 지역 사회 확산을 위한 체감형 성평등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둘째, 디지털 기반 젠더 폭력 등의 환경 변화와 제주도민의 낮은 안전 체감도를 고려하여 여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상의 성범죄 증가, 특히 청소년,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수법에 의한 성 착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변화된 환경과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에 관한 정책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 필요함
 - 또한 지속적으로 제주지역 여성의 야간보행 불안감이 높고 폭력피해 여성 비율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일상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강화가 필요함
(제주도민 53.2%(전국 50.8%)가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여성(58.1%)이 남성(48.1%)보다 10%p 높음.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39.6%)은 전국(36.5%)보다 높고, 여성(50.5%)이 남성(28.7%)보다 22.4%p 높음(「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셋째,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족·돌봄정책의 다각화 및 지자체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최근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만혼현상의 고착화,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꺼리는 현상 등 가족구성 지연 및 생애주기 다각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 근거한 ‘가족의 정의’를 개정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배제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마을과 지역이 함께 돌보는 가족·돌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가족 관점의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2020.12.31.)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면노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아동돌봄 종사자 등 여성 필수노동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원 정책 개발, 나아가 취업취약 계층 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정책 대응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 및 도의 뉴딜정책 추진으로 청정 제주의 비전을 반영한 그린 일자리 등 미래 지향적 여성일자리 창출 요구 증대가 예상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의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반영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 플랫폼 노동 등 국내외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아울러 제주도내 창업지원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친화적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정책 모색이 필요함

나. 환경 분석

1) 강점(Strength)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강점 요인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을 반영한 성 주류화 정책 추진체계 구축임.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성 주류화 총괄 조직인 성평등정책관 신설과 하부행정기관까지 아우르는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운영 등을 통해 강화되었음
- 둘째, 성평등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임. 성별, 세대별, 지역출신별 등 차이로 인하여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증대되었음. 특히, 미투와 페미니즘에 대한 공론화로 인해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음
- 셋째, 지역 여성단체들이 도정의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넷째, 제주해녀(문화), 설문대 할망 등 여신, 김만덕 등 지역 여성역사문화 자원과 치유, 힐링 등 자연환경 자원이 풍부함. 이는 성평등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및 관광,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음

2) 약점(Weakness)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약점 요인은 첫째, 조직, 인력, 예산, 협업 네트워크 등 성평등-가족정책의 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임.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은 전체적인 양성평등정책의 틀에서 정책 기반을 강화하거나 안정화되지 않아 여전히 정책 기반이 미약함
- 둘째, 지역 성평등 네트워크 및 단체 활동이 미흡함. 지역 여성단체들이 도정의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성단체의 인적, 물적 역량 및 관련 민관네트워크는 미약한 수준임
- 셋째, 지역사회의 공고한 가부장적 문화와 성역할 규범임. 이는 여성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영역 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가족 및 돌봄 등 사적영역 참여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넷째, 여성 경제활동 기반이 미흡함. 영세형 기업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가족친화 및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3) 기회(Opportunity)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기회 요인은 첫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여성·가족친화’ 전략 신설로, 중장기적인 양성평등 정책 반영이 예상된다는 점임.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 정책에 성 주류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여성가족관련 연구, 교육, 문화 등 인프라 강화 및 연계 운영 요구 증대임. 여성가족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평등교육과 문화 관련 인프라의 강화 및 통합적 연계 운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셋째, 디지털 기반 젠더폭력 문제 및 미투운동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광객 및 도민의 욕구가 상승함
- 넷째, 코로나19와 가족의 변화 등으로 인한 돌봄, 가족, 여성 친화 환경 조성 요구 증대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마을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과 정책 추진체계강화가 요구됨
- 다섯째, 제주여성의 실질적 경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요구 증대됨. 코로나19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성별임금 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4) 위협(Threat)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위협 요인은 첫째,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와 인지도임.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다양한 정책 영역 중에서도 양성평등정책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낮아 정책 강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 둘째, 국제자유도시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개발과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돌봄과 가족친화, 환경 보호 등 성평등하고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셋째, 청년과 정착주민의 지역 유출 문제임. 이는 성평등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주민 구성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3〉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환경에 대한 진단(SWOT 분석)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을 반영한 성 주류화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 제고 ○ 지역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활동 참여 활성화 ○ 지역 여성역사문화 및 자연 자원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인력, 예산, 협업 네트워크 등 성평등-가족 정책의 기반 미약 ○ 성평등 네트워크 및 단체 활동 미흡 ○ 공고한 가부장적 문화와 성역할 규범 ○ 여성 경제활동 기반 미흡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여성·가족친화」 전략 신설로, 도 중장기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예상 ○ 여성가족관련 연구, 교육, 문화 등 인프라 강화 및 연계 운영 요구 증대 ○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광객 및 도민의 욕구 상승 ○ 돌봄, 가족, 여성 친화 환경 조성 요구 증대 ○ 제주여성의 실질적 경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와 인지도 ○ 개발과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만연 ○ 청년과 정착주민의 지역 유출

2. 정책 비전과 방향

가. 비전과 목표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비전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이주배경, 장애유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로 설정함
- 이와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평등하게 일하는 제주’, ‘함께 돌보는 제주’ 3대 목표를 수립하였음

비전	함 게 만 들 어 가 는 성 평 등 평 화 도 시 제 주
-----------	--

목표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평등하게 일하는 제주	함께 돌보는 제주
-----------	--------------------	--------------------	------------------

정책 영역 (방향)	도정 전반의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여성인권 · 안전 기반구축 및 건강증진 강화	다양한 가족 · 돌봄 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 및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전략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및 전략 강화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리더십 강화 · 지역 성평등교육 연구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 · 여성 건강 증진 확대 · 여성의 안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 정책 개발 및 기반 강화 · 돌봄가족친화 환경 조성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 정책 기반 강화 · 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 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 ·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나. 추진 방향

- 본 연구는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4개의 정책영역 (방향)과 14개의 전략과제, 3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함

〈표 4〉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전략 및 과제)

정책 영역	추진전략	과제
1. 도정 전반의 성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및 전략 강화	1.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2. 성인지정책 업무 지원체계 강화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운영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1. 제주 젠더거버넌스 구축·운영 2. NGO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강화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리더십 강화	1. 공공기관 심의·자문위원 성별균형구성 목표관리 2. 마을 자치단위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3. 제주여성인재DB 활용 강화
	지역 성평등교육·연구 기반 강화	1.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및 아카이브 구축 2. 여성가족연구기관 기능 강화: 제주여성가족재단 설립 3.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기능 강화
2. 여성 인권·안전 기반구축 및 건강증진 강화	폭력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	1. 젠더폭력에 대한 다각적 대응 강화 2.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지원 확대
	여성의 건강권 확대	1.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2. 제주여성 건강실태조사 정례화 3. 생활 속 건강관리 지원 및 강화
	여성의 안전권 강화	1. 성인지적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2. 도민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및 강화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안심 사업 추진 4. 자치경찰위원회의의 성인지적 행정 강화
3. 다양한 가족·돌봄 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다양한 가족정책 개발 및 기반 강화	1.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2. 가족정책 전달체계 구축·강화 3. 제주형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
	돌봄·가족 친화 환경 조성	1. 마을중심 가족·돌봄 생태계 구축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복지 추진체계 강화 3. 도민 돌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1. 일·생활균형지원 조례제정 및 지수 관리 2. 일·생활균형 지역네트워크 강화 3. 영세사업체·여성 집중기업 가족친화 인증 확대
4.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 및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일자리 정책 기반 강화	1. 여성일자리 전담팀 및 인력 확충 2.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
	여성일자리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1. 대상별 직업교육훈련 개발 2. 여성 직업훈련기관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	1.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확대 2. 지속가능한 여성 스타트업 육성 지원 3. 여성창업지원 공간 확충
	제주형 여성 일자리 개발	1. 디지털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2. 제주 가치를 담은 여성 일자리 개발 3. 워라벨 일터 조성 지원

3. 정책영역별 핵심 추진과제

가. 도정 전반의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및 전략 강화

1-1-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은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흐름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변화와 연동하여 성평등정책관 및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등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성평등정책관-여성가족청소년과, 양성평등담당관제 등)는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민선7기 양성평등정책 성과 평가를 통해, 성 주류화 전략 확산을 위한 성평등 정책관 조직 위상 미약, 여성 안전과 인권 업무의 이원화(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조직의 부재, 가족과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의 담당 조직 위상 미약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
- 뿐만 아니라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까지 포함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타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도 전체 예산 중 '성평등 및 여성권익' 예산은 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을 통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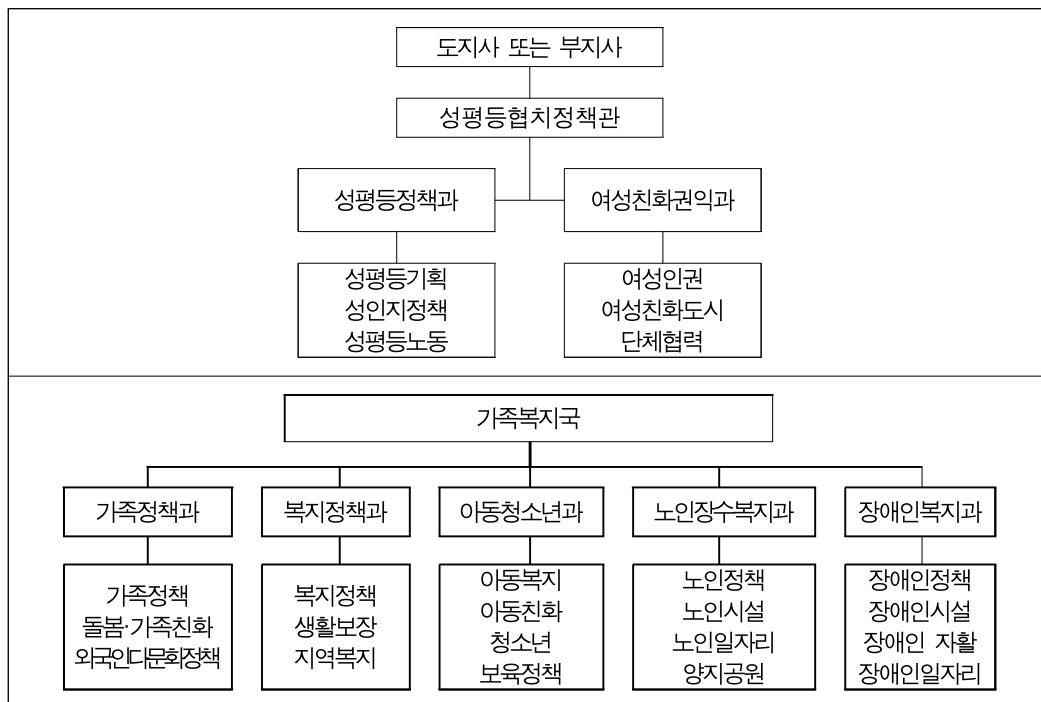
□ 사업 내용

①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 위상 강화

- 사업목표 : 참모형 조직구조의 한계 극복을 위해 부서 위상 강화 및 의사결정권 제고, 부서간 협업체계 운영을 통한 성평등-가족정책의 실효성 강화
- 추진내용
 - 성평등(여성)과 가족정책을 분리하고 각 담당조직의 위상 강화
 - 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조직 위상 강화 및 확대
 - 국장급 성평등합치정책관으로 격상하여 성평등정책 실행력 및 실효성 제고
 - ※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 사례
 -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여성권익정책팀'을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

- 성평등노동팀, 단체협력팀 등 신설
- 보건정책과 가족복지정책 분리 후, 가족, 복지, 아동청소년정책 등을 아우르는 '가족복지국' 신설 : 가족정책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 성평등협치정책관과 가족복지국의 협업체계 운영
- 별도의 성평등-가족정책 상시소통협의체 운영 및 양성평등위원회의 협업 기능 강화
 -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이슈) 관련 사항 공유 및 협업 추진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 개선안〉



㉒ 성평등·여성권익 예산 0.25% 확보

- 사업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중 '성평등 및 여성권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예산은 0.17%로 타지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실행력 및 내실화 강화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및 타 자치단체 양성평등 정책 예산 분석 및 자료 구축
-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성평등 및 여성권익' 분야 예산은 10,330백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17%로 나타남. 이는 서울과 대전 등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0.05~0.08% 낮은 수준임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 확대 개편에 따른 사업 기획 및 예산 수립
- 단계적 예산 확대 편성 : 도 예산의 0.23 ~ 0.25%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도 예산	양성평등정책 예산					
	전체	성평등, 여성권익	가족	보육, 아동, 어린이	청소년	기타 (경비)
5,829,868	334,841	10,330	19,119	285,849	18,837	806
100%	5.7%(100%)	0.17(3.1)	0.32(5.7)	4.9(85.4)	0.3(5.6)	0.01(0.2)

자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양 행정시 포함)

〈2021년 '성평등 및 여성권익' 예산 지역 비교〉

(단위 : 백만원,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101,178(0.25%)	12,516(0.22%)	10,330(0.17%)

*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권익보호담당관 소관 예산 , 대전광역시 : 성인지정책담당관 소관 예산

③ 양성평등담당관제 정착 및 운영 활성화

- 사업목표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본청뿐만 아니라 행정시 및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동력 강화로 효율적인 성주류화정책 확산

○ 추진내용

- 양성평등담당제 총괄(기획조정실장, 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운영(성평등정책관) 업무의 유기적 협력 방안 마련
- ※ 민선8기 양성평등정책 조직 개편 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성평등협치정책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평등담당관제 총괄업무와 운영업무 통합 필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계획 수립·관리로 부서장의 책임성 강화
- 양성평등담당관제도를 통한 공무원 성인지정책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 성인지교육 필수화로 공무원사회 성인지역량 제고
 - 양성평등담당관(과장), 양성평등담당(팀장) : 성주류화정책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담당관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연2회) 운영
- 양성평등담당자 : 성주류화정책 실무교육 확대(상,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 담당자별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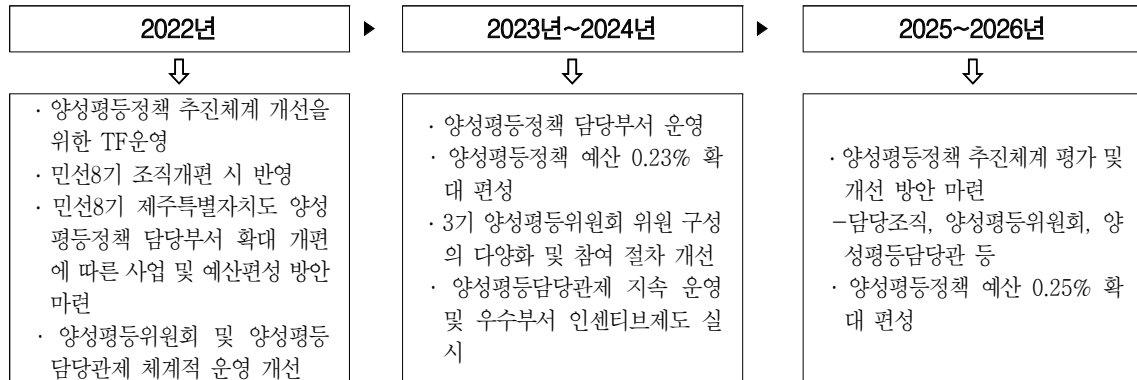
구 분	직 책	성주류화정책 교육 및 네트워크
양성평등담당관	부서장(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류화정책 필수교육으로 이수(의무화) - 부서별 성주류화제도 추진·점검 위한 정례회의 참석(연2회)
양성평등담당	부서 주무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류화정책 필수교육으로 이수(의무화)
양성평등담당자	부서 예산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류화정책 실무교육 확대(상, 하반기)

- 성평등 활동 부서 인센티브제도 신설(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외)
 - ‘우수 양성평등담당 부서’ 발굴 및 시상
 - 성평등목표 수립,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정책환류 등 성인지정책 협력 우수사례

4 양성평등위원회 강화, 정책권고제 확대

-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협의조정기능 강화 및 성평등 거버넌스 활성화
- 추진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2030세대, 여성농어민, 이주민, 젠더전문가 등 다양한 도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성인지정책 교육 및 워크숍 정례화
 - 위원회 활동 내용 및 성과 등 도민사회 홍보를 위한 성과 공유 기회 마련
 -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현, 성평등정책분과,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여성및가족친화분과 → 여성일자리 및 노동 분과 확대
 - 기획단을 별도 구성하여 성평등의제 발굴 및 기획, 실행을 위한 분과 활동 활성화
 - => 분과위원회에서 핵심과제 정책개선방안 구체화 : 정책권고제와 연동
 - ‘정책권고제’ 확대 운영 및 운영성과 도민사회 홍보 강화
 - 정책권고제 사업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하여 확대 실시
 - 정책영역별로 구축된 시민거버넌스 내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정책권고제 대상과제 발굴
 - => 모니터링 => 정책피드백 등 정책이행점검 환류체계 구축·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및 양 행정시 각 부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등

1-1-2

성인지정책 업무 지원체계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 공무원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2019, 이해웅·신승배)¹³⁾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40% 이상이 '제도 및 업무 이해 부족'으로 응답함.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29%, '나의 성인지적 관점 변화' 21%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제주지역 공무원들은 성인지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공무원 성인지 역량 교육'(21.6%)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성인지정책에 대한 이해 욕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컨설팅 지원 강화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성인지정책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이행과 성인지교육 이수 실적이 성과관리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① 공무원 성인지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사업목표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지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상시 교육과정의 전문적인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도 성평등정책관, 도 인재개발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등 협업
 - 정책 분야별, 직급별, 성별 등 대상별 맞춤형 공무원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인지정책 전문 강사 양성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기능 강화
 - ※ 5급 이상 간부급 성인지교육 의무 실시
 - 성인지교육 방식의 다각화 : 소규모 워크숍 및 대면 컨설팅 연계 운영

② 성인지정책 업무 성과관리(BSC)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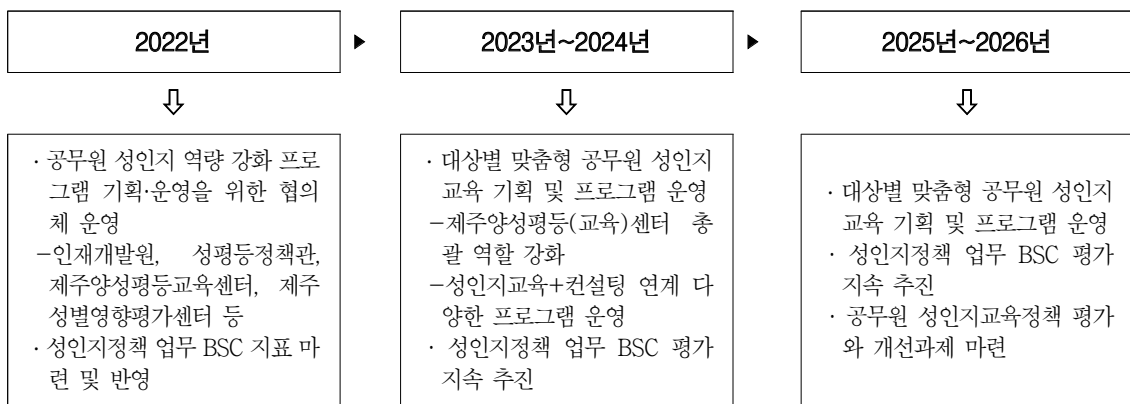
- 사업목표 : 성인지 정책 실행의 동기부여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독려
- 추진내용
 - 성주류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업무이행과 성인지교육 이수 실적성과관리 반영. ※ 서울, 울산 등 타지역 성과관리에 반영 중

13) 조사대상자 452명 중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공무원 62명 응답(여성 26명, 남성 36명)

- 주요 평가항목

- 성인지교육 참여율
- 성별영향평가 업무 이행
 -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제출
 -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 : 개선의견 반영률 및 정책개선 이행을
- 성인지예산 연계(대상과제)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1-1-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운영

□ 사업 배경 및 목적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 성인지통계, 지역 성평등 지수 등은 모두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들 간의 연계 추진 시 정책 개선성과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정책 담당조직은 대표적으로 성평등정책관과 예산담당관(회계과)으로 각 부서 업무연계 및 통합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등의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제주지역 성주류화 거버넌스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제주지역 젠더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행정의 역할 강화와 도민 주도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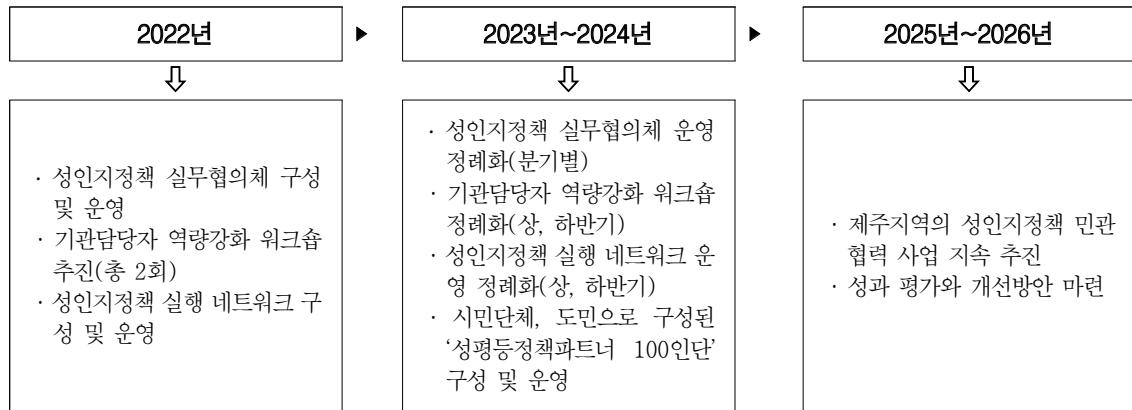
① 성인지정책 실무협의체 운영

- 사업목표 : 성인지정책 간 연계 및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를 통한 단계별 업무 추진의 효율화 및 정책 실행력 강화
- 추진내용
 - 주요 추진단계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실무협의체 운영
: 대상과제 선정 → 분석서 작성 및 검토 → 정책개선 이행점검 관리 등
* 서울, 충남 등 운영
 - 기관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총 2회) : 상·하반기 인사이동에 맞춰 각 1회 실시
 - 구성원 : 도 및 양 행정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결산 기관담당공무원,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전문가) 등

② 성인지정책 민관네트워크 운영

- 사업목표 : 성인지정책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과정 등에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공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치체계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 추진내용
 - 시민단체 회원, 도민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정책파트너 100인단' 운영
: 제주지역 성평등 이슈 논의, 성평등 목표 마련,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등 참여
 -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컨설턴트-공무원-학계'로 구성된 성주류화 실행 네트워크 운영
: 성인지정책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전문가 검토의견, 우수 개선사례 발굴 등 과정별 실행 네트워크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예산담당관
- 협력 부서(기관) : 양 행정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담당 부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2)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1-2-1

제주 젠더거버넌스 구축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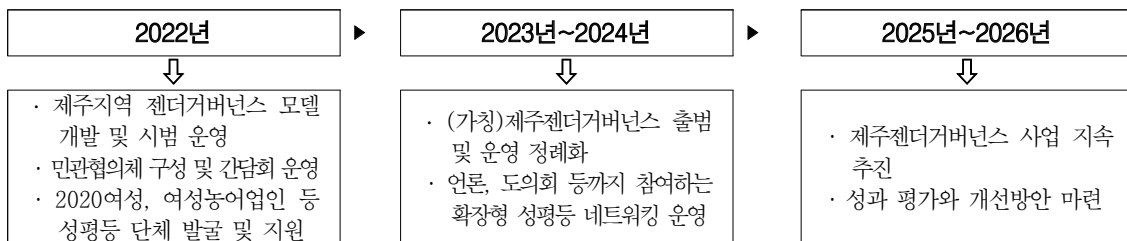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젠더거버넌스 사업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
- 반면, 민간영역과 협력구조는 소수의 민간전문가들이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성주류화정책 실행을 위한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을 뿐, 그 외 민간협업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구조는 전무한 실정임. 이에 젠더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요구도 지역사회에서 지속되어왔음
- 따라서 민간 여성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소통채널의 구축 및 정례적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민+관+도의회+언론 등 확장형 네트워킹 사업까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제주지역 젠더거버넌스 현황 분석 및 모델 개발(시범 운영)
- 성평등정책관과 지역 내 여성단체 민관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운영(연 2회 이상)
 - 지역사회 성평등 비전 및 아젠다 형성
 - 지역 밀착형·체감형 성평등사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테이블
 - 지역사회 성평등 현안 및 대응 논의
- 2030여성, 여성농어업인을 비롯한 경제·문화·정치 등 영역별 다양한 성평등 관련 단체 발굴 및 협력 사업 운영
- (가칭)제주젠더거버넌스 출범 및 운영 정례화
 - 언론, 도의회 등까지 참여하는 확장형 성평등 네트워킹 사업 운영
 - ※ 제주양성평등기금 활용 방안 고려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연구원
- 협력 부서(기관) : 도내 관련 여성단체, 언론, 도의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모델 개발)

1-2-2

NGO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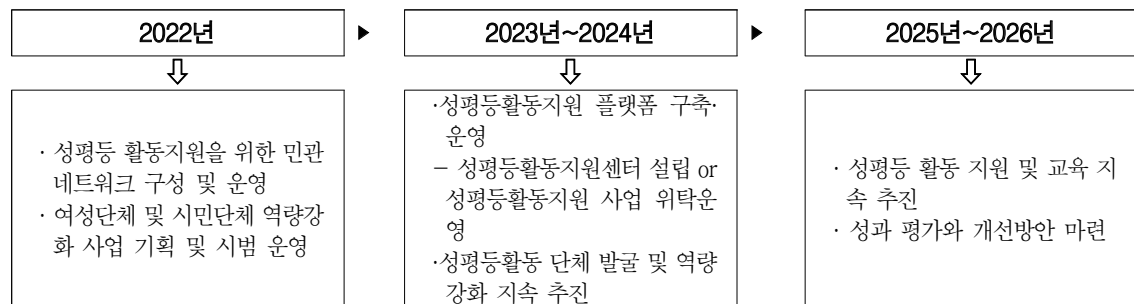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그간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성평등 활동들이 양성평등정책 및 성주류화 정책으로 제도화되면서, 성평등 관련 NGO들의 활동, 정책참여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2021년 7월 기준, 총 16개이며 소속 회원 수는 12,950으로 제주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는 적지 않으나,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성주류화정책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이 매우 소수인 상황임
- 따라서 성평등 제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축인 NGO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성평등 시민조직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지역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 제주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립 or 성평등활동지원 사업 위탁운영(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 ※ 제주양성평등기금 활용 고려
 - 허브형 공유공간 조성 및 다양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 마련
- ※ 참고: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지역주민과 만들어가는 성평등플랫폼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는 성평등 가속화 센터
- 풀뿌리 여성 소모임, 성평등 활동단체 발굴 및 인큐베이팅
-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역량강화 사업 강화
 -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성평등 공익활동가 인턴십제도 신설 : 인건비, 성인지적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성평등활동가 아카데미 : 양성평등교육센터 성평등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단계별, 실무형) 강화
- ※ 참고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풀뿌리 여성주의 아카데미, 페미니스트 운동이론 아카데미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3)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리더십 강화

1-3-1

공공기관 심의·자문위원 성별균형구성 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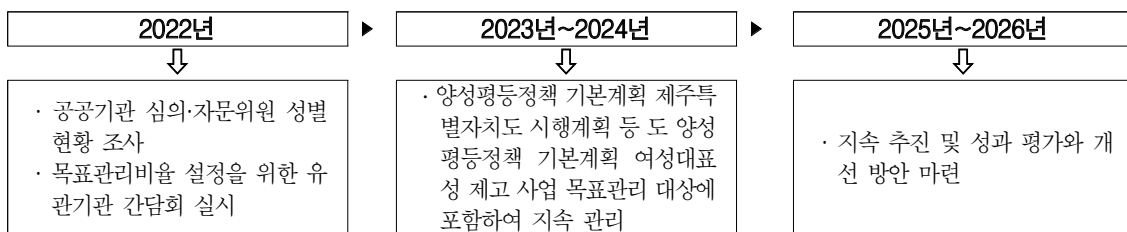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부문 중심의 여성대표성 관리를 통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공공부문 관리직 여성비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0% 이상인 상황임
 -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관리직 목표치(19.6%) 대비 초과 달성('21. 8월)
 -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 ('19. 12월) 44.3% → ('20. 12월) 45.3%
 -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 : 18% → ('21. 8월) 24% 초과 달성
 -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목표: 20% → ('21. 8월) 18.52% 미달
- 그러나 제주지역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인 16개 공공기관의 심의·자문위원회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으로 포함·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대표성 관리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공공기관 심의·자문위원 성별현황 조사
 - 기관별 당연직, 위촉직 구분된 성별 구성현황 조사 및 기본통계 생산 및 관리
 - ※ 2020년 도의회 서면질문에 따라 수집된 자료(2020년 3월기준)에 의하면, 도내 16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심의·자문위원 502명 중 여성위원은 109명으로 21.7%(당연직 위촉직 구분 없음)이고 여성위원 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0%(15명 중 0명)인 경우도 있음
 - (출처: 2020년 4월. 도의회 서면질문 수집자료. 당연직, 위촉직이 분리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표성 목표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 목표관리비율 설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도내 공공기관

1-3-2

마을 자치단위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지역사회 기초단위인 마을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여성대표성 확대 기반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마을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성별균형참여를 제도화하고, 성평등교육, 여성의 공동체 조직 활동 및 리더십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여성 역량을 강화함
- 기존의 여성리더 대상 획일화된 리더십 교육이 아닌, 현장형, 단계별, 상시적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 여성들의 실질적 요구 반영하는 정책 운영이 요구됨
- 다양한 영역 맞춤형 리더십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실질 정치 관련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및 제주지역 여성정치 대표성을 제고함

□ 사업 내용

① 마을, 자치단위 의사결정기구 여성대표성 확대

- 사업목표 : 마을, 자치단위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동등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여성 역량 강화
- 추진내용
 - 리·통장, 어촌계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리더 성별통계 구축 및 여성대표성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표성 목표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 ‘제주도 성평등마을 조성사업(성평등마을규약 개정사업)’ 전역으로 확대
 - 마을 개발위원회(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남녀 평등참여 제도화
 - 마을 내 의결관선거권이 남성가장으로 대표되지 않도록 1인 1표제로 여성의 투표권 보장 등
 - 마을리더(이장, 각 위원회 위원장 등), 농수축협 조합장 및 대의원, 어촌계장 대상 마을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확대
 - 성평등마을만들기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 제주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장협의회, 부녀회장협의회, 제주지역 마을규약·성평등마을규약 관련 연구자(제주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마을자치,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기관 및 개인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하여 성평등마을규약 개정사업의 실행력 및 파급력 강화

② 마을리더, 여성농어업인 성인지적 리더십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표 : 가부장적 전통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제주지역 마을단위에 특화된 성인지적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평등인식 제고

○ 추진내용

- 제주지역 마을에 특화된 성인지적 여성리더십 교육 콘텐츠 개발
 - 부녀회, 마을리더, 여성농어업인 등 마을 여성들 대상별 콘텐츠 수요조사 실시
 - 대상별, 단계별, 현장형 교육프로그램 마련
 - 예) 성평등마을만들기, 회의 주재하는 법, 스피치교육, 마을정치 아카데미, 농·수축협 등 조합형 경제공동체 운영과 참여 방법 등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여성리더십 과정과 연계 및 협업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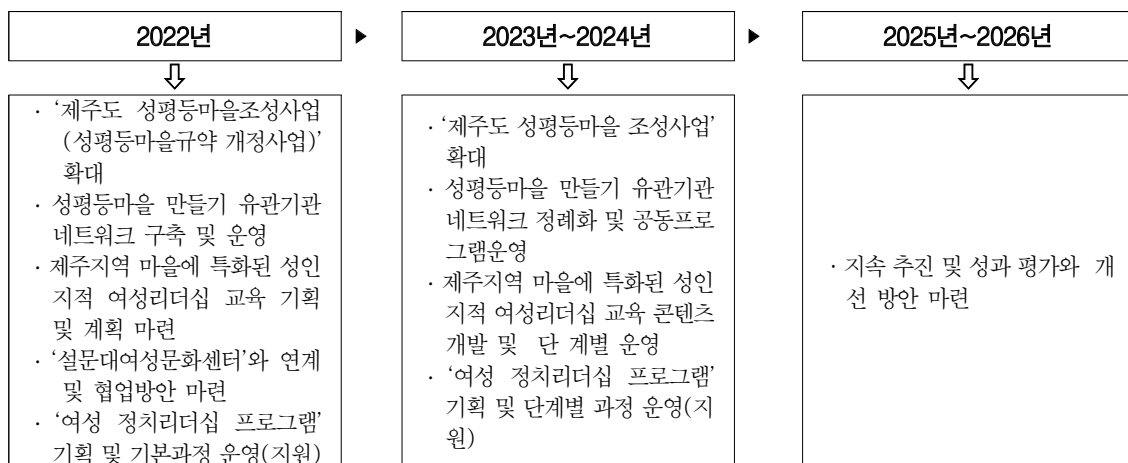
③ 지역 현안 중심 '여성 정치리더십 프로그램' 마련

○ 사업목표 : 실제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정치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정치 도전 및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역량 강화 및 지역중심 여성정치네트워크 기반 마련

○ 추진내용

- 실제 지역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한 여성정치리더십 워크숍 운영
 - 제주지역 성평등정치를 위한 여성정치리더십 콘텐츠 개발
 - 제주지역 현안 및 정치구조, 성평등정치에 대한 이론과 지식 등
-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과정을 교육과정으로 구성
 - ⇒ 이후 해당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여성네트워크 형성으로 확장
- 청년여성정치 의제 섹션 구성
 - ※ 제주양성평등기금 활용 방안 고려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수산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의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도내 관련 여성(시민)단체 등

1-3-3

제주여성인재DB 활용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여성인재DB(데이터베이스)”는 제주 여성인재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에 처음 구축되었으며, 현재 총 1,729명이 등록되어 있음(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 한편, 현재 제주여성인재DB의 활용범위는 “도 산하 각종위원회 및 공공기관 이사회 등 구성 시 여성위원 후보자추천으로 활용”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지속 발굴·정보 축적 강화 및 여성인재 적극적 활용 및 지속적인 성장 기회 제공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 내용

① 다른 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시스템 마련

- 사업목표 : 타 인재DB와 연계로 제주여성인재 DB 활용도 제고
- 추진내용
 - 국가인재DB, 여성인재DB(여성가족부), 제주 청년인재POOL, 제주연구원 인재등록 DB 등과 연계방안 마련
 - 분야별 지속적인 인재 발굴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체계 구동
 - 추가 발굴 실적관리

② 제주여성인재DB 활용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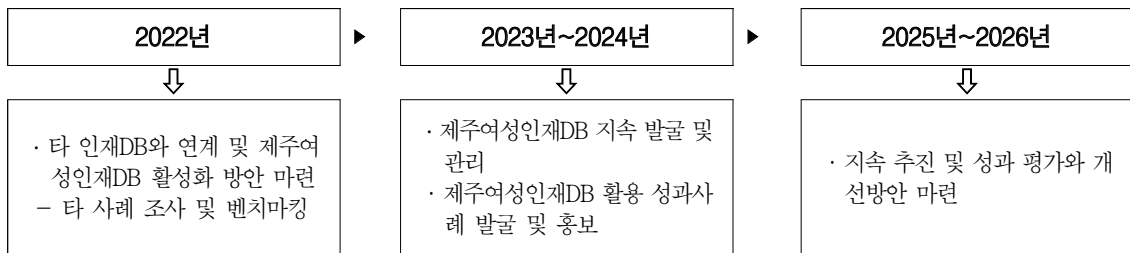
- 사업목표 : 다양한 콘텐츠 제공, 성과사례 발굴로 여성인재 역량강화 및 성평등정책 관심 제고
 - 추진내용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 제공 콘텐츠(“여성인재DB 뉴스레터”) 및 여성인재아카데미 프로그램 정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간물(정책브리프 등) 등을 제공·홍보함으로써, 여성인재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
 - 제주여성인재DB 활용 성과사례 발굴 및 홍보
 - 여성인재 뉴스, 여성인재 스토리 등 제주지역 사례 발굴 및 홍보
- 예)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 뉴스레터” 콘텐츠

※ 참조 사례

-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 청년인재 POOL 구축」

- “숨어있는 청년인재발굴, 청년정책 추진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청년정책 정보의 맞춤형 제공”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도내·외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외에도 “관심 분야에 따라 분류된 청년대상 맞춤형 관심정보 제공, 유사관심사 청년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청년인재양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우수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함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여성가족부, 제주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 지역 성평등교육·연구 기반 강화

1-4-1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및 아카이브 구축

□ 사업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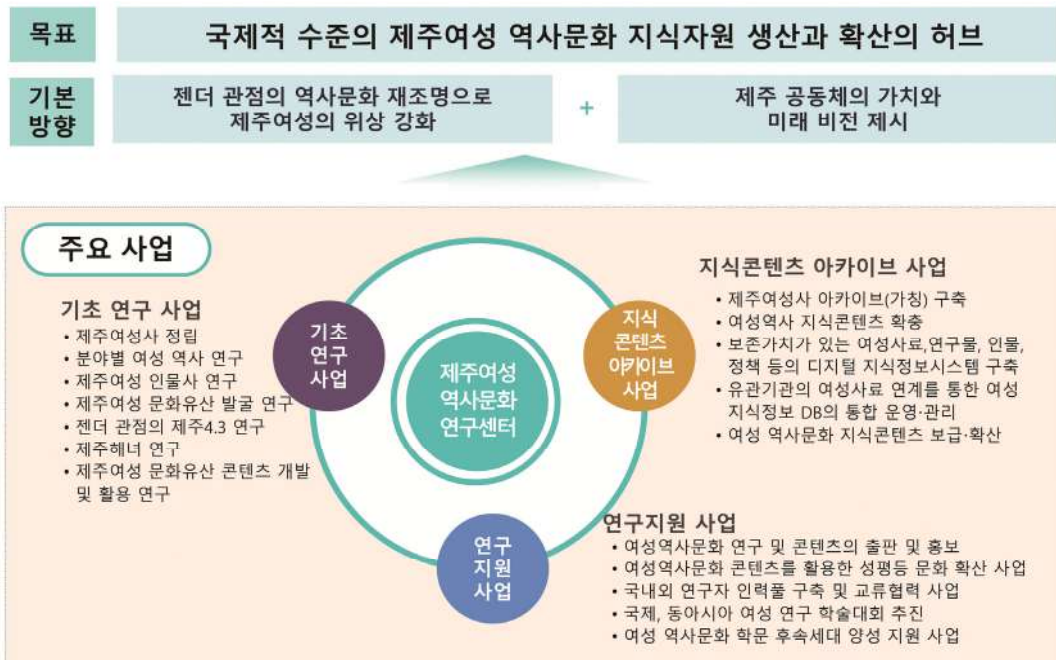
- 국내 지역 여성의 역사문화 및 여성사에 관한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출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제주 지역에서도 1998년 민선 2기 제주도에 이르러 보건복지여성국 신설 및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출범 등 제주의 성평등정책(여성정책)의 태동과 함께 제주여성의 삶과 역사문화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이처럼 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여성의 역사문화 및 여성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성평등 차원에서 제주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문순덕, 2009; 김은실, 2018).
-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은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당면 과제이기도 하며, 최근 제주 여성문화 연구, 자료 아카이브 구축, 후학 양성 등 체계화된 연구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의 시대적 요구가 생겨나고 있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2018; 정여진 외, 2018)
-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여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과 브랜드화’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를 설치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음. 동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해 제주도는 사례 및 자료 조사, 추진계획 수립, 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제시하였음(고지영 외,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8기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의 지속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1단계 : 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및 통합적 재구성을 위한 TF(이하 TF)” 운영
 - 제주 여성 역사문화 관련 기관(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만덕기념관, 해녀박물관 등), 연구교육기관(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지원센터(가칭), 여성단체 및 도민이 함께 참여
 - 행정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논의구조 마련
 -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의 비전, 목표, 운영원칙, 지향 등에 대한 논의

〈제주여성역사문화센터의 목표, 기본 방향, 주요 사업(안)〉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의 목표, 기본방향, 주요 사업



자료 : 고지영 외(2020),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단계 : 센터 설치 및 아카이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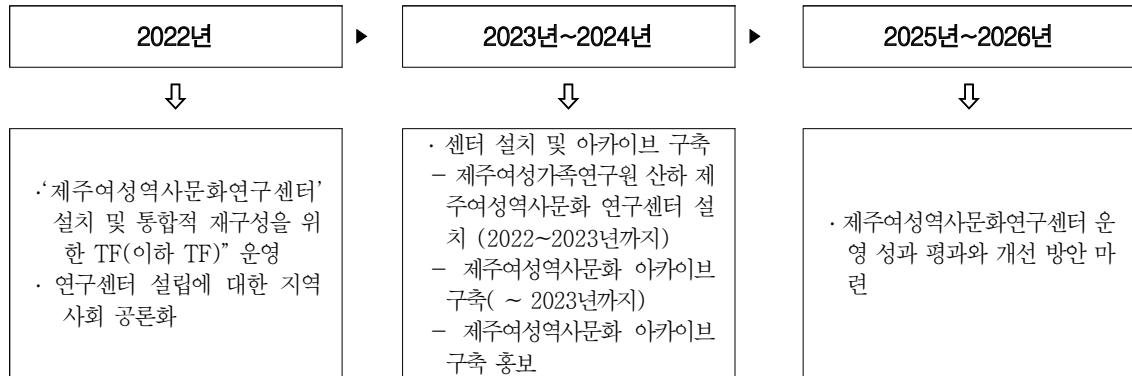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산하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2022~2023년까지)
- 제주여성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2023년까지)
 - 분야별, 매체별 자료 발굴·수집 및 DB생성을 위한 조사·연구
- 제주여성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홍보

○ 3단계 : 제주여성문화·역사·교육 관련 기관의 장기적 비전 논의를 위한 TF 운영

- (가칭) ‘2030년 플러스, 성평등 제주’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여성문화·역사·교육 관련 기관들의 통합적, 유기적 재구성을 위한 청사진 마련 및 추진
 - TF를 중심으로 내용적, 기능적, 공간적인 면에서 관련 시설들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 조직, 도민 의견 반영된 청사진 마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¹⁴⁾의 BTL 만료시기인 2029년 이전까지 청사진 및 추진전략 완료

14)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구)여성회관으로 출발하여 제주여성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여성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교육 기관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을 통해서 제주여성 관련 신화, 역사, 생활 등과 관련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개발 및 전시하는 문화사업의 고유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여성 관련 교육과 전시의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제주여성 역사문화’의 전문적인 연구 기능은 부재하여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와의 중복성이 없음(고지영 외, 2020)

□ 연차별 추진 계획



* 향후 장기적으로는 제주여성문화·역사·교육 관련 기관의 장기적 비전 논의를 위한 TF 운영(민선 9기).
특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BTL 완료시기인 2029년 이전까지 청사진 및 추진전략 완료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등 전 부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만덕기념관, 해녀박물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도내 관련 여성(시민)단체 등

□ 사업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국제적인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흐름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여성정책 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지역에서도 여성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연구 수행 기관의 설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이에 2005년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거쳐 2014년 3월 제주지역의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출범하기에 이룸
- 전국의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은 대부분 재단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재단 형태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14개 중 8개 기관)으로, 이를 통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네트워크,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의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여성 및 가족분야 정책연구 및 주요사업 수행, 도내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체제 구축 등 여성·가족 정책 종합플랫폼 구현하고,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연계, 성평등 인식확산 사업 등 다양한 기능 수행으로 도민의 성인지력 증진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 기존의 정책연구뿐 아니라 제주여성의 역사문화 가치 확산 및 성평등 문화 조성 등 지역 성평등 플랫폼 구현을 위한 '제주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 제주여성가족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TF팀 운영
 - 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 및 의견수렴
- 제주여성가족연구 기관의 기능 확대
 - 지역여성역사문화 연구 및 사업
 - 성평등교육문화 확산 사업
 - 성평등 네트워크 허브 기능 및 역할 강화
 - 다양한 도민참여 프로그램, 소통 공간 지원
 - 지역사회 성평등 아젠다 발굴을 위한 도민참여 원탁회의 개최(매해)
 -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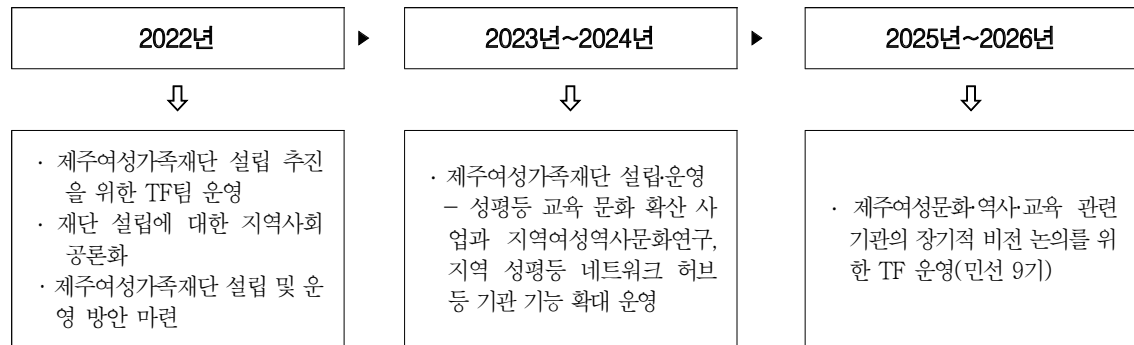
- 마을 기반 자치조직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국내외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등

※ 각 지자체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 설립 유형

(2021.11월 현재)

재단(8개)	서울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충북여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6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부설 기관(2개)	대전세종연구원(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

□ 연차별 추진 계획



※ 향후 장기적 관점(민선9기)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역사문화센터(가칭) 등과 함께 각기 흩어져있는 다양한 관련 시설들의 통합적 재구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1-4-1. 참조). 특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BTL 만료시기인 2029년 이전까지 청사진 및 추진전략 완료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사업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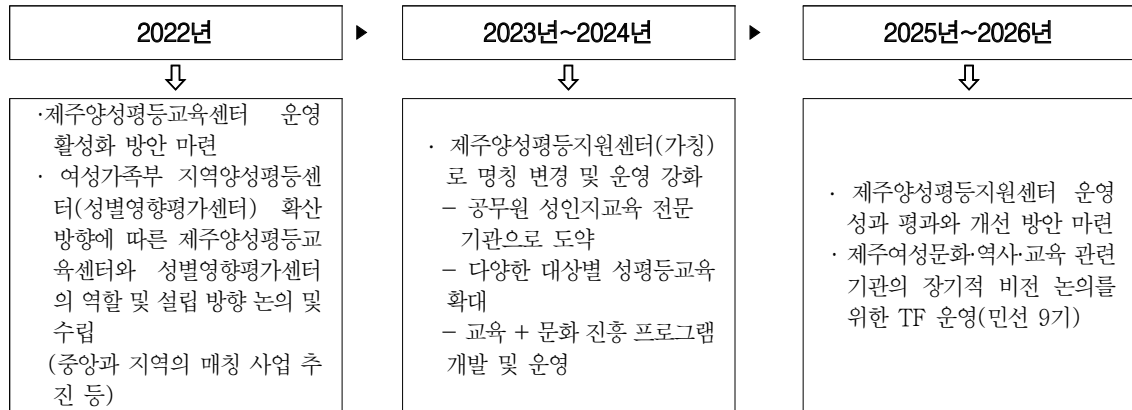
- 가부장적 문화가 공고한 제주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평등 교육, 거버넌스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성평등교육문화 진흥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아젠다 형성을 위한 다양한 민관네트워크 구축·운영이 필요함
- 민선7기 도정의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20.9월)는 도내·외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성과로 인정받고 있으나,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양성평등교육센터의 양성평등교육 및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다양한 도민참여, 학교 및 여타 시민교육과의 성평등교육 연계 강화, 양성평등 관련 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함

□ 사업 내용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교육 및 문화 확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양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교육 의무 추진
 - 성별영향평가센터 성주류화정책 교육 및 공무원교육 업무 전반 담당
 - 견고한 제주지역 가부장제 문화 개선 위한 도민 성평등교육 확대, 강화
 - 도민 성평등교육 대상 발굴 및 교육 참여방안 마련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성인지교육 필수화
 - 개발위원회 등 마을단위 자치조직 성평등 교육 확대 방안 마련
 - 성평등 관련 NGO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성평등 활동 지원
 - 지역주민·단체 성인지정책 도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공분야, 농어업, 관광산업분야 등 제주지역 주요 산업분야 종사 여성 맞춤형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 제주양성평등지원센터(가칭)로 명칭 변경 운영
 - 제주지역의 성평등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기능에 한정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현재의 기관명을 ‘(가칭) 제주양성평등지원센터’로 변경
- ※ 향후 여성가족부 지역양성평등센터(성별영향평가센터)¹⁵⁾ 전국 확대 방향에 따른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역할 및 설립 방향 논의 필요(중앙과 지역의 매칭 사업 추진 등)

15) 지역양성평등센터는 현재 전국 5개 지역 유치 중임(인천, 경기, 경북, 전남, 부산)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역 양성평등교육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 등

나. 여성 인권·안전 기반구축 및 건강증진 강화

1) 폭력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

2-1-1

젠더폭력에 대한 다각적 대응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 젠더폭력 관련 정책은 국가의 정책기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어, 제주 실정에 맞게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기반을 내실화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및 가정폭력 재발방지 모니터링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 확대할 필요 있음
 - 제주에서는 올해 전 동거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을 비롯하여 친부의 두 자녀 상습 성폭력 사건, 상습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받던 중 아내를 살해한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사건 발생
 - 국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7명으로 집계됨(한국여성의전화, 2020). 이는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폭력 사건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가해자의 처벌강화(39.8%)와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21.6%), 가해자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강화(18.7%) 순으로 나타나(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2020), 젠더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제주 상황에 맞는 보호 체계의 전환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정책 개발 및 지원 강화 필요
- 아울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전통적 유형의 젠더폭력을 벗어나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필요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2020) 결과,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여성은 해당 사이트 완전 탈퇴(14.3%)와 아이디 새로 작성 재사용(12.5%) 순으로 응답하며 남성보다 대응 인식이 저조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29.4%)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남성(66.7%)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데이트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신체적 피해, 불법영상촬영 피해 외 경제적 폭력, 언어폭력에 대하여는 폭력으로 인지하는 수준이 낮으며,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외부적 조치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51.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사업 내용

①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분원 설치 및 긴급피난처 확대 운영

○ 사업목표 : 제주도 전역의 위기여성을 24시간 긴급하게 상담하고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서귀포 권역의 1366제주센터 분원 설치

○ 추진내용 :

- 서귀포 권역의 1366제주센터 분원 설치의 필요성 조사 연구
- 서귀포 권역 내 유관 상담소는 존재하나 24시간 긴급피난처 역할 수행하는 기관 부재
- 서귀포 권역의 긴급피난처 추가 설치 및 운영 확대
- 현재 제주 도내 긴급피난처 역할을 1366제주센터가 담당하는 상황으로 서귀포 권역의 피해 여성을 긴급하게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적, 물리적 제약 발생
- 서귀포 권역에 분원 설치 될 경우, 긴급에 맞는 신속 피난 지원 가능

②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지원 확대

○ 사업목표 : 여성폭력 현장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핫라인 대응시스템(경찰, 1366센터, 상담기관의 합동 대응)의 지원 확대로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 추진내용 :

- 핫라인 대응시스템 지속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대응 및 피해 최소화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속 모니터링 지원 강화
- 20년 실적 : 연계 71건, 모니터링 744건
- 피해자 맞춤 보호 지원
- 여성폭력 피해 발생 시 경찰 출동 및 상담원 동행 지원 서비스 지속 지원

③ 보호시설의 입소자 1인 1실 확보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 사업목표 : 보호시설 내 입소자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영위되도록 1인 1실 개인별 또는 가족별 사용 공간으로 단계적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추진내용 :

- 보호시설 입소자 및 시설 종사자 대상의 욕구 조사 연구
-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적 추진 수립
- 이주여성보호시설의 가족보호시설 확장 전환 모색
- 기존 제주이주여성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 초과 및 학령기 남아 동반의 피해자 입소 불가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④ 장애인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

○ 사업목표 :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여성의 맞춤형 케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보호시설 신규 설치

○ 추진내용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1개소 설치
- 장애 특성에 맞는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환경과 인력 배치를 맞춤형으로 지원

※ 운영현황 : 전국의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20. 6. 30. 기준 광주 1개소, 경기 1개소 총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피해자의 보호가 매우 미흡한 실정

○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위탁

⑤ 폭력피해 여성의 자립지원 강화

○ 사업목표 : 폭력피해 여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확대 지원, 통합적 자립지원 시스템 및 지원 제도 마련

○ 추진내용 :

-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 보호시설에 입소한 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퇴소 후에도 관리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
- 보호시설의 집단생활에 대한 거부감, 개인의 직장 상황 등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도 주거지원, 직업훈련, 자립지원금 등 자립 지원정책 마련
- 주거지원, 직업훈련, 자립지원금 등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 제도나 인적, 물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접근하여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제주도내 보호시설 폭력피해여성 대상 욕구조사에서, 시설에서 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로 1순위 주택지원(88.78%), 2순위 취업알선 등 구직지원(50.0%), 3순위로는 아동학습 및 상담지원(27.5%)으로 나타나(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 폭력피해여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특히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 있음

⑥ 디지털성범죄상담소의 내실있는 운영 및 기능 강화

○ 사업목표 :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심층 상담, 수사 기관 동행, 의료지원 등)를 제공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내실있고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상담소의 운영 지원 및 기능 강화 확대

○ 추진내용 :

-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비 편성

- 현재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는 의료비가 보조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 연계 의뢰하여야 가능한 상황으로 이마저도 의뢰기관의 자체 의료비가 넉넉하지 않아 원활한 피해자 회복 지원에 한계 발생
- 불법영상을 직접 삭제 지원 할 수 있는 기능 강화
- 현재 불법영상을 삭제 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유 및 실행 권한이 중앙디지털성 범죄상담소와 경찰청에만 부여 돼, 피해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삭제 지원·대응하는데 한계 발생
- 디지털성범죄상담소의 상징적 기능인 직접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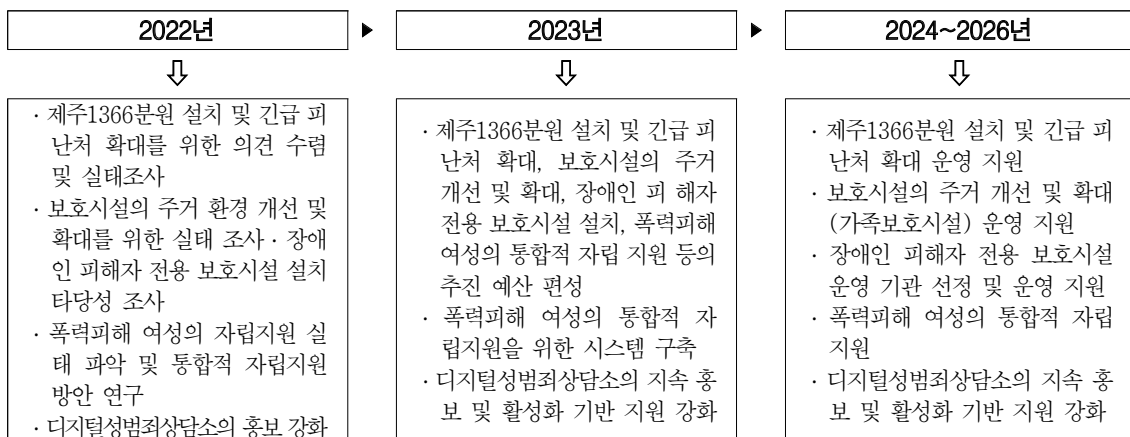
- 추가 인력 배정

- 현재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 배정된 2명의 인력으로 피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상담, 수사 기관 법원 동행,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운영, 각종 예방 및 연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배정 필요
-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상담소를 시범 운영 계획 수립하면서 명시한 주요 기능 :

-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상담 및 초기 긴급 삭제지원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불법영상물 등 유포 및 삭제 지원 현황 모니터링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 수사기관 법원 동행, 무료 법률 연계 지원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제공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위탁 관리 센터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향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 : 여성 폭력, 인권 지원 관련 유관기관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도에서는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도민 성평등 교육(일반도민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일반도민 대상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20년도에는 코로나의 변수로 전년도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여, 상황·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방법의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활동 지원 필요
-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학교 내 교육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나, 그 이후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체계적인 교육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년 대상의 교육 사각지대 발생
 - 청년들이 젠더폭력과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 향상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시행 확대 및 다양한 참여 체계 방안 마련 필요
- 다양한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균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및 지원 확대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2020) 결과, 폭력예방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수강 유경험 비율은 74.5%로 비교적 높았으나, 디지털성폭력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도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75.3%를 차지하였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도에서도 신체적 폭력 피해, 불법 촬영 피해에 대하여는 높은 폭력 인식도를 보인 반면, 경제적 폭력, 언어 폭력에 대하여는 낮은 인식도를 나타냄
 -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젠더폭력 발생 현황을 인지하여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 지원 강화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필요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가해자들의 폭력 행위 근절과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운영되었지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의 주체, 효과성 등의 논란을 거듭하며 점점 예산 지원이 감액되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실정
 - 제주도의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조사 연구를 통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하는 가정폭력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필요
- 젠더폭력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홍보 필요
 - 현재 제주도에서의 인식개선 홍보는 3·8세계여성의날, 보라데이, 성매매 추방주간, 여성폭

력 추방주간 등 기획 기간을 활용한 홍보·캠페인 형태가 대부분으로 이 외의 다양한 방법,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홍보 필요

□ 사업 내용

① 청년세대 성인권 인식개선 지원 확대

○ 사업목표 : 청년세대가 폭력예방교육, 성인권 교육 등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환경 및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인권 향상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

- 지역 내 대학생들이 성폭력예방교육, 데이트폭력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등 다양한 젠더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도내 대학교 간 공동 추진체계 구성 및 예산 지원
- 청년들이 여성 인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 구성
 - 각종 정책 거버넌스, 모니터링단의 청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년 활동가 육성 및 기반 지원
- 청년들이 여성 인권 향상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 마련
 - 다양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모니터링단 등에 청년할당제·비례제 운영으로 청년들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

② 젠더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 사업목표 : 젠더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행정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추진내용 :

- 비의무대상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의 의무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입력하는 통합관리시스템처럼 제주도 예산 지원으로 실시되는 비의무대상의 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분야별, 직군별 다양한 비의무대상의 균형적인 젠더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및 성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비의무대상의 젠더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 정책과의 연계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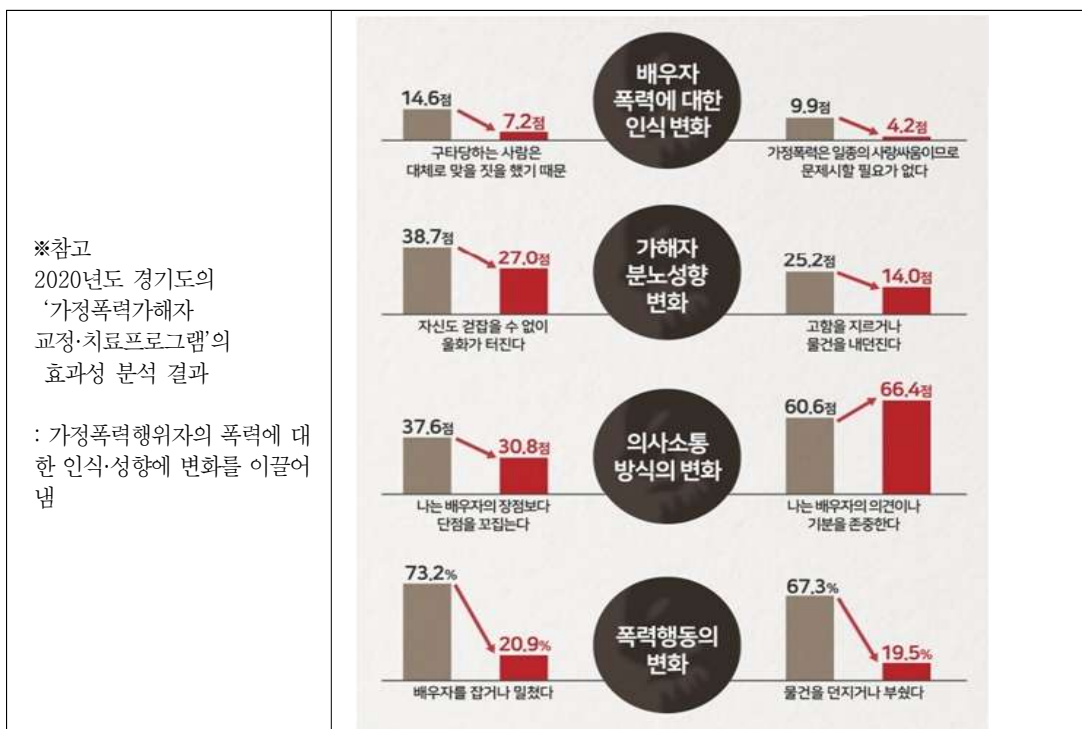
- 마을 단위의 사업비 지원 시 예방교육의 실시 횟수, 이수 인원 등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및 특전 제공하여 비의무대상의 교육 참여도 향상 방안 마련
- 지역 내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의 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수당의 차별화 또는 기본 수당 외 추가 쿠폰(공영 관광지 관람권, 제주 경제 활성화 연계형 꾸러미 등) 지원

③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사업목표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색

○ 추진내용 :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조사 연구 실시
 - 제주도의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상자 효과성 분석을 통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가정폭력상담소)을 확대 지정하고 예산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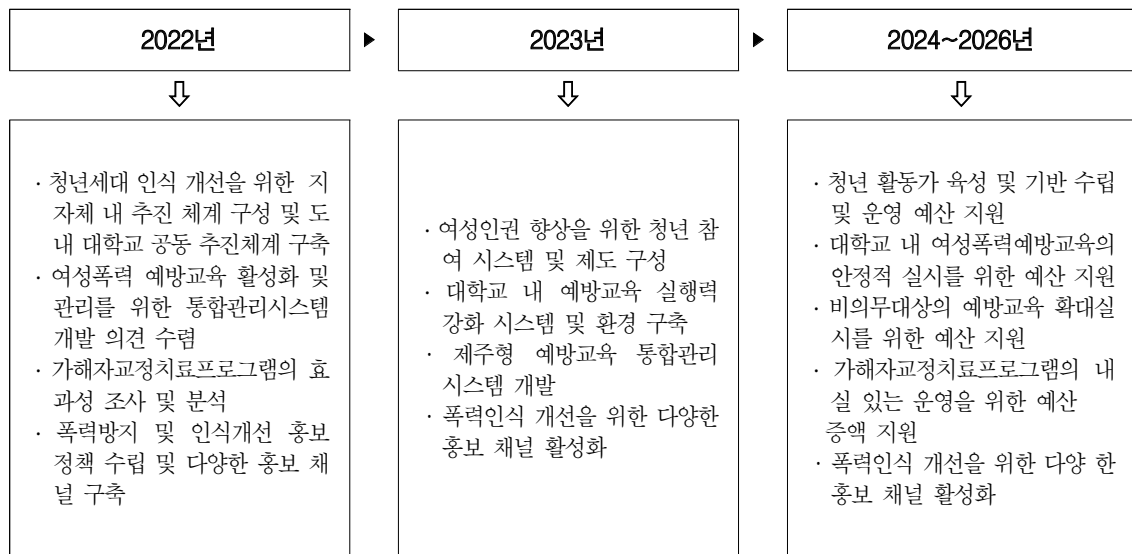
④ 젠더폭력 방지 및 대응 홍보 강화

○ 사업목표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교육, 데이트폭력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 교육 등 다양한 젠더폭력 발생을 방지하고 폭력 발생의 구조적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강화

○ 추진내용 :

- 관 주도형 홍보 추진
 - 지자체 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의 도민 대상 각종 행사,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강연회 등에서의 여성폭력방지 및 인식 개선 부스 운영 의무화 또는 사업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민·관 협력 체계형 홍보 추진
 -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참여 인원 50명 이상 규모의 집합 행사, 사업 진행 시 폭력 인식개선 영상물, 포스터, 콘텐츠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의무화 또는 사업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확대 지원
 - 제주도민이 선호하는 SNS는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의 순으로 나왔으나, 성별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남성의 선호율이 더 높고, 밴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카페는 여성의 선호율이 더 높게 나타남(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2019)에 따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상시 홍보 확대 추진 필요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교육 지원 관련 유관 기관, 여성폭력상담소

2) 여성의 건강권 확대

2-2-1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 사업 배경 및 목적

- 산후조리는 출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과정이며, 저출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산후조리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18년 보건복지부가 국내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부 정책 1순위(51.1%)로 ‘산후조리원 이용 경비 지원’을 꼽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비용지원 등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 현재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서귀포시 1곳을 포함하여 총 13곳으로 양질의 시설과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들의 호응을 크게 얻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
 - 제주시 권역의 인구 밀도와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서귀포시)의 접근성, 산모의 이용 수요도, 욕구 등을 파악한 제주시 권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설치 방안 모색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자녀양육 등에 대한 부담으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 등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젠더 건강불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함
 - 여성들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16점 만점 평균 7.48점으로 중간보다 아래이고 중장년기가 가장 높고 기혼유배우자가 집단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 2021)
 - 제주지역 여성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 본인이 건강하다고 평가한 여성은 47.9%, 남성은 58.4%로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건강평가가 낮게 나타남(통계청, 2020)
 - 최근 1년 동안 여성·가족 건강문화 관련 시설이용률은 1~5회 미만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일회성 이용이 대부분이므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

□ 사업 내용

① 제주시 권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설치

- 사업목표 : 국가적인 최대 현안인 저출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산후조리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제주시 권역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시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추진내용 :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실태 및 제주 도내 산모 대상 욕구 조사 실시

- 제주시 권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
- 지역별 인구, 거리 등을 고려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 확충 필요
- 타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호응도 및 만족도 참고
- 이주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회복 지원
-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② 제주여성힐링공간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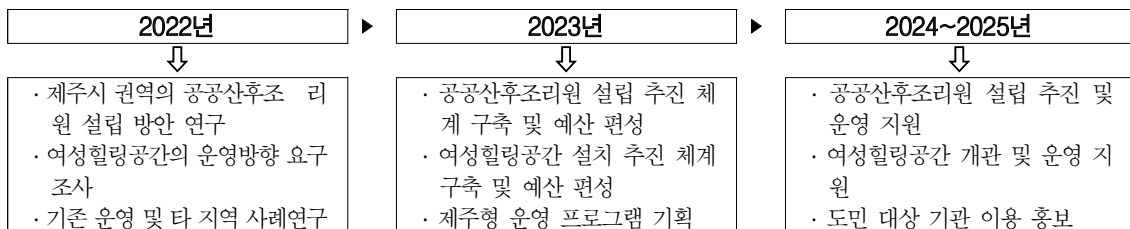
○ 사업목표 : 일과 가사,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심신이 지친 여성의 정신건강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문화 복합 공간 제공

○ 추진내용 :

- 제주여성 힐링공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주여성 힐링 공간 운영 계획 및 목표 및 세부과제 수립

목표	세부 과제	사업 내용
심신통합 여성 건강문화 조성 기능	여성건강 상담 및 건강역량 강화	·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건강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역량강화 교육
	심신치유문화 프로그램 운영	· 심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숲 체험 및 명상요가 프로그램 운영 · 심리극을 활용한 삶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체력증진 시설 운영	· 여성의 신체적 특성 고려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배치 · 여성의 생애주기 고려한 체력 증진 운동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연대 기반 공동체 강화	건강문화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 건강문화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 건강문화 자조모임 발굴 및 성장 지원 · 제주여성건강축제 운영
	침과 만남의 공간 운영	· 만남과 소통이 있는 힐링 카페 공간 구성 · 가변형의 여성건강문화 열린 공간 운영
	다양한 가족을 위한 공간 운영	· 일시 돌봄(육아) 공간 운영 · 개수대와 전자에이징이 구비된 공유 부엌 제공
여성 건강문화 연계 및 교류 확대	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 보건 의료 관련 및 여성가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여성건강문화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 개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민주적 운영 구조 정착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간 이용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창구 마련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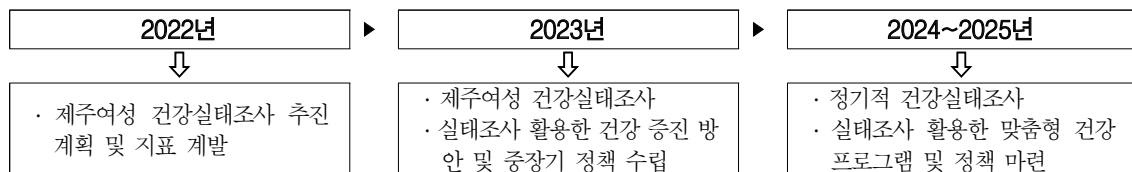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국가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을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파악, 건강 증진 사업을 계획, 평가하고 있으나 제주여성의 건강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주 지역의 특성과 제주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제주여성 건강실태조사가 필요함
- 제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돌봄의 영역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여가 시간 활용도 또한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등(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2019) 제주 여성의 생활 형태와 건강의 연관성을 둔 실태조사 필요

□ 사업 내용

- 국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항목을 기반으로 ‘제주여성 건강실태조사’ 지표 개발
 - 국가에서 만 19세 이상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 항목
 - :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건강지식,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사회 물리적 환경,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제활동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관련 항목이 추가 됨
 -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 항목 외 제주 여성의 실정에 맞는 항목 예시
 - : 여성의 경제활동 분야, 경제 활동 연수(경력), 지역(마을별,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삶의 형태, 돌봄의 주체여부, 가사 시간, 여가 시간 활용도, 자녀의 수(자녀의 미취학, 취학, 성인 여부), 가족 병력, 출산 여부, 초경과 환경(폐경) 시기, 약물 복용(치료제 및 건강보조제 등), 건강 증진서비스 경험(건강검진서비스, 물리치료, 마사지, 도수 치료 등), 건강관련 교육 이수 및 프로그램 참여 등
- 활용 방안
 - 지역, 직종, 연령, 계층별 통계 데이터를 도출하여 제주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의 근거 제공
 - 연도별 통계를 비교하여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 : 보건소

□ 사업 배경 및 목적

- 건강은 여성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꾸준한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생활 속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함
- 제주지역 여성(63.2%)은 전국 여성(51.8%)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지만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규칙적 운동실천은 31.0%로 전국 여성 35.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8)
- 「사회조사」(통계청, 2018)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성(55.4%)이 남성(52.3%)보다 생활전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도 여성(27.5%)이 남성(30.6%)보다 낮아 일 상생활에서의 건강증진정책이 필요함

□ 사업 내용

① 여성의 건강검진 수검률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목표 : 여성의 건강검진 촉진을 위한 체계 및 제도 강화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여성의 건강한 삶에 기여
- 추진내용 :
 - 이동식 건강검진센터 운영
 - 건강검진·의료서비스의 거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산간, 도서지역에 이동식(예 버스형) 건강검진센터 정기 운영
 - 노년층, 장애인, 이주민 등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을별 순회 운영
 - 간단한 건강 관리 교육 제공
 - 건강검진 수검률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 제주도민의 건강검진 수검률(2015~2017)은 2015년도 여성 72.6%, 남성 72.1%, 2016년은 여성 74.7%, 남성 71.7% 수치를 보여 2015~2016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수검률이 높았으나, 2017년에는 여성 77.2%, 남성 79.7%로 남성의 수검률이 높았음(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2019)
 - 2017년도 제주도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전국 시도별과 비교했을 때, 1위는 울산(83.4%), 2위 광주(82.3%), 3위 세종(8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는 전국 평균 78.5%에도 크게 못 미치는 73.1% 수준으로 최하위 순위를 기록(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2019)
 - 제주지역의 남성과 여성 비교 수치를 넘어 제주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여성의 지역, 직종, 연령별 등 다양한 여성의 비수기 상황에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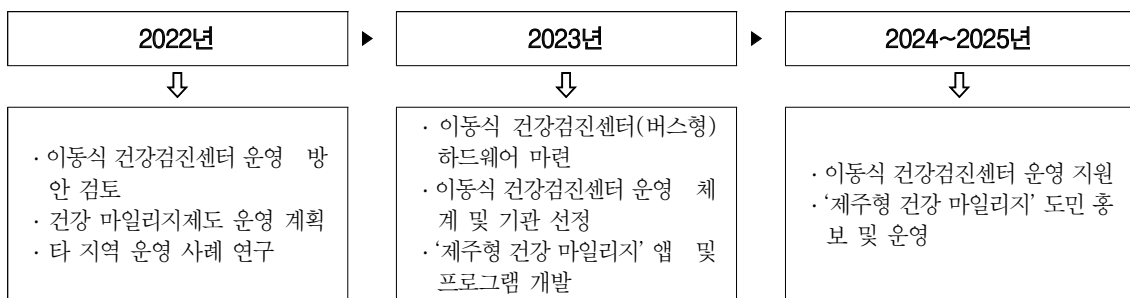
② 건강 활동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도입

○ 사업목표 :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건강을 주체적으로 관리 및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강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제주 여성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 추진내용 :

- 서울시 중구 건강마일리지 제도 벤치마킹
- 제주형 건강 마일리지 앱 개발
 - 생활 속 걷기 운동을 기반으로 한 만보기 기능 탑재
 - 지역별, 연령별, 난이도별 건강 프로그램 및 걷기 코스 개발
 - 계절 특성에 따른 이벤트 코스 개발
- 마일리지 부여
 - 제주형 건강 마일리지 앱을 활용하여 운동을 할 경우 마일리지 부여
 - 보건소 또는 건강의료기관의 교육,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시 마일리지 부여
 - 적립된 마일리지는 '탐나는전'과 같은 지역화폐와 연계하거나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참여도 증진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보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3) 여성의 안전권 강화

2-3-1

성인지적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 사업배경 및 목적

- 안전장비 사용(소화기 사용, 완강기 사용,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사용법)이나 재난 발생 시 (대피소 인지, 생존수용, 응급처치, 위기대처법) 등 재난대응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제주특별자치도, 2021). 여성에 대한 생활안전 뿐 아니라 위기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안전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개 영역(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범죄안전, 보건안전) 44개 세부영역에 걸친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등 여성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및 실적에 대한 성별분석이 전무하고 도민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 및 지원이 부족함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에 의하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목표를 연 인원 400명으로 정하고 있어 교육인원 목표 상향 조정 및 여성참여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 활동가와 전문 강사의 역할이 한정적이고 활동가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제주특별자치도, 2021) 여성 활동가가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주체로 참여하도록 역량강화를 통하여 모범을 보이고 안전 관련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제주지역의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등 활동을 위한 참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에 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동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비 우리 생활안전 길라잡이」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징하는 표현이 발견되어 제주지역의 재난 안전 매뉴얼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여성재난안전 활동가 과정 개설을 통한 안전전문 활동가 양성
 - 교육목적 : 재난 발생 시 지역안전을 담당하는 주체로 활동
 - 교육강사 : 여성안전 활동가(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및 전문가 활용한 교육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및 대피방법, 지역 내 재난대피소 위치,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생활안전 수칙 등
 - 교육대상 : 각 마을단위 부녀회, 여성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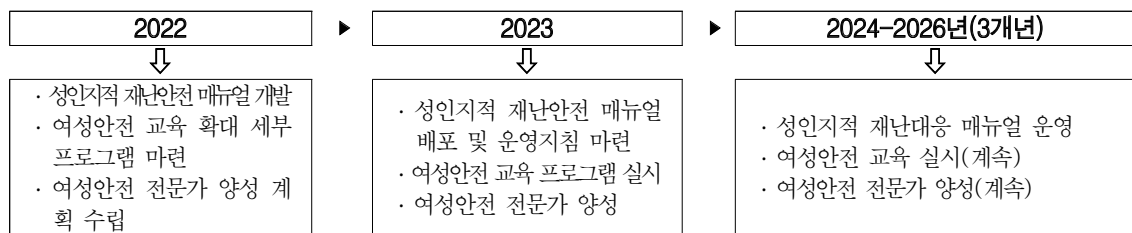
○ 안전교육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안전교육 참여자들에 대한 성별통계 작성, 이후 여성참여 확대를 성과목표로 지정하고 담당자 및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성인지적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

- 여성 및 재난취약자를 위한 재난 취약지역 발굴 및 안내
- 기존 대피소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대피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대피소 지도제작 및 보급
-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장소선정 및 안내, 시설물 설치, 운영 등에 재난취약자의 이해를 고려한 안내서 작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재난대응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치행정과

2-3-2

도민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및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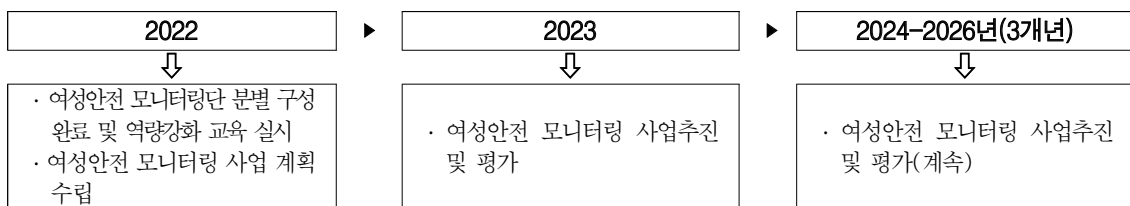
□ 사업배경 및 목적

- 도민참여단 구성 관련 조례 제정에 근거 2019년 6월 도민참여단 위촉 및 임원진 구성, 4개 분과위원회 구성(성평등분과, 경제활동분과, 도시공간분과, 가족친화분과)되어 있으나, 현재 2개 분과만이 활동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도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등 정책 환류를 도모하고 도민 참여를 통한 지역 내 시설 인프라 및 다양한 공간과 환경을 점검하고 실천방안 제시

□ 사업 내용

-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교육
 - 기존의 참여단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로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확보
 -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
 - * 도민안전체험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 내 안전 관련 시설 점검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 안심벨 위치 및 작동, 위험한 시설물이나 도로 점검, 방치된 폐가 관리 등
 - 도민참여단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 및 정책 개선방안 제안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재난대응과, 도민안전체험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2-3-3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안심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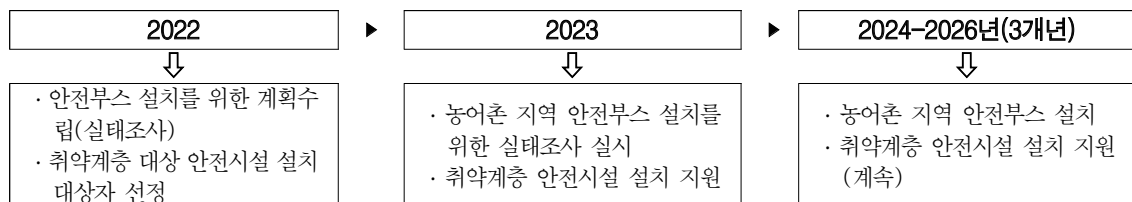
□ 사업배경 및 목적

- 지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전관련 정책을 세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 지역 선정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시설물 설계와 설치가 필요함
- 기존의 여성1인가구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4종세트인 원룸용 동작 감시센서(외출 시 외부인 침입여부 확인), 침입알림장치(무단침입 확인 시 경찰 연락하여 자택 동행방문), 휴대용 호출벨 보급, 무선비상벨 등의 설치는 침입자 확인 용도로는 유용하나 범죄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장비 설치 지원이 방안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농어촌 지역 중심 안전부스 설치 확대
 - 범죄예방을 위하여 인구가 많은 도심지 이외에 농어촌 지역에 안전부스 설치 확대
 - 공중전화 부스를 개조하여 스마트 안전부스 설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범죄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비상 시 안심부스로 대피하면 지동문이 닫히는 운영체계)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지원 확대
 - 여성 1인가구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창 설치 지원
 - 성인지적 우수관광 사업체 선정 및 지원
 - 우수관광사업체 지원사업에 여성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평가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우수업소를 선정사업에 반영
 - 기존의 평가항목인 안전·위생관리 분야에 성인지 관점의 평가지표 개발
 - 종사자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 안내
 - 여성(1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장비(전기충격기, 호신용품 등) 비치 및 대여
- ※ 참고: 현행 평가항목(사업체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사회 공헌도)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협회

2-3-4

자치경찰위원회의 성인지적 행정 강화

□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안전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 91조 제 4항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에 사무분담에 있어 주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1.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 계절별 특수성, 2. 중복되는 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3. 주민 및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증대를 고려하여 상호존중과 협력을 극대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
-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 및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분야에 걸쳐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청소년 분야 실무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도 교육청, 도 경찰청, 자치경찰단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양성평등 정책을 기획하는 성평등정책관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여성을 포함한 생활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실행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자치경찰위원회 여성·청소년 분야 내부자료 2021)
- 자치경찰위원회의 양성평등 관점의 안전정책 실행력 강화하고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정책 마련이 필요함

□ 사업 내용

① 주요 관광지 여성안전 환경 조성

- 목적 : 여성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내 화장실 및 안전시설 점검 및 범죄 예방활동 강화
- 주요 내용
 - 도내 공영 관광지 선정하여 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탐지활동 및 안심비상벨 추가설치 및 점검, 홍보강화
 - 불법촬영기기 관련 예방 홍보물 부착 (여성안심 화장실 인증 등)

② 자율방범단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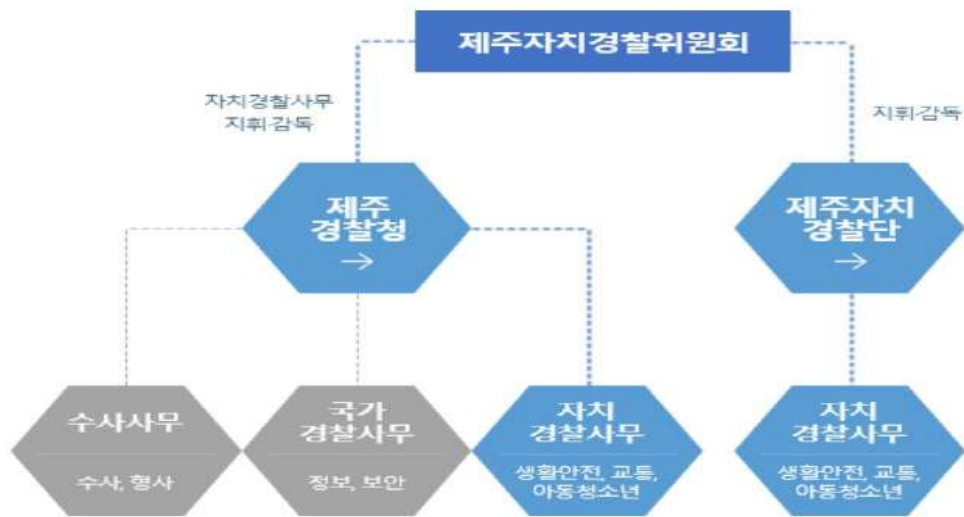
- 지역단위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나 마을 공동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마을의 자연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역자율방범단의 기능강화와 지원확대

- 지역의 부녀회와 녹색부모회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및 권장
- 여성의 관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제3조 2항, 조직 및 구성)

현행	개정안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



□ 연차별 추진 계획

2022	▶	2023	▶	2024-2026년(3개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안전 협의체 활성화 · 주요 관광지내 안전시설 설치 · 자율 방범단 지원 확대 논의 및 근거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설치 대상 관광지 확대 · 자율 방범단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설치 대상 관광지 확대 (계속) · 자율 방범단 지원 확대(계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및 자치경찰위원회,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자치행정과

다. 다양한 가족·돌봄 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1) 다양한 가족정책 개발 및 기반 강화

3-1-1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¹⁶⁾ 및 제주의 가족 형태 변화와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및 전담부서를 통한 가족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성
 - 여성가족부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양한 가족 지원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함
 - 제주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가족센터’ 운영 계획 수립이 수립됨으로써 효율적 정책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제주는 (2018년 기준) 1인 가구 29.4%로 가족의 형태 및 세대 구성에서 1인 가구 형태가 주류적 형태가 되었고, 비혈연, 한부모, 기타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하고 있음(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23).
 - 2020년 5월 기준 외국인 인구 24,589명(총인구의 3.5%), 외국인의 성별 인구는 여성 10,879명(여성비율 44.2%)으로 외국인 중 여성 비율은 2019년보다 증가하였고(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12) 2020년 6월 기준 고령인구는 15.4%(여성 17.9%, 남성 12.9%)로 고령인구 증가 추세임(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15)
 - 그동안 가족정책은 아동, 노인, 여성 등 개인 대상별 정책이 주를 이루었고 제주의 보육 및 돌봄 지원과 취약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및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포괄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 체계는 미흡함
 -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가족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전담부서 신설 및 종합적인 중장기 가족정책 수립을 통한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필요함
- 민선7기 보건복지여성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여성권익정책, 가족친화, 청소년, 보육정책, 아동친화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족친화’ 업무 단위로만 가족 관련 업무가 분류되어 있고 가족정책 담당자는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정책의 목표와 실행계획이 부재한 채 업무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시급함

16)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내용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양한 변화, 가족 구성원 개인 권리에 관한 관심 증가인데,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기반 조성임

-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이 설치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중 가족정책 업무는 가족담당관에서 기획·집행하고 있음. 여성정책이나 보육정책과 분리하여 가족정책 및 가족 영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와 특화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경기도는 여성가족국이 설치되어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일가정지원과 등으로 가족 영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광주광역시도 여성가족국과 그 산하에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교육청소년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가족과 산하에 여성정책팀이 있어 여성·가족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도 관련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신설 및 자체적인 가족정책 설계 등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필요함.

□ 사업내용

①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사업목표 :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추진내용 :
 - 가족 지원 전담 조직과 업무
 - 정기적인‘가족실태조사’(5년마다) 실시¹⁷⁾ 사항
 -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 ‘가족정책위원회’(협의조장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족 형태와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 지원보장의 근거와 내용

② 가족정책 담당 조직 신설

- 사업목표 : 다양한 가족정책 개발 및 기반 강화를 위해 ‘가족복지국’(가칭) 산하에 ‘가족정책과’를 설치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설계와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 추진내용
 - ‘가족정책과’를 신설해 가족정책 담당 조직기반 구축
 - 가족정책팀, 돌봄가족친화팀, 외국안다문화정책팀을 조직해 가족 다양성 포용
 - 다양한 가족정책 개발과 정책사업 운영 평가 및 환류 체계 강화
 -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 ‘가족실태조사’(5년마다) 실시 계획 수립·관리

17) 제주지역 가족실태조사는 2009년 제주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고 2014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만 19세 남녀 3,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중단 상태임. 정기적인 가족실태조사 실시로 가족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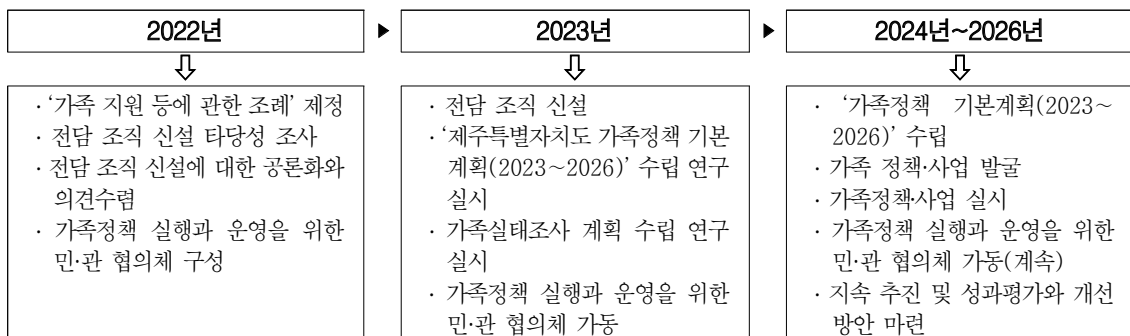
③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¹⁸⁾

○ 사업목표 :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대응력 및 가족 다양성 수용 강화와 다양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정책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족정책 실행력 확보

○ 추진내용 :

- 정부의 가족정책(여성가족부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기초 반영
- 정기적인 가족실태조사 결과 반영
- 가족정책 중장기 계획
- 가족 서비스의 방향 및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
- 중장기 가족정책의 연차별 실행계획과 추진체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가족정책의 핵심 영역과 영역별 세부과제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생활 여건 보장 정책·사업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내용
- 가족정책·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 명시

□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역 관련 단체

18)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일·생활 균형과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 서울형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경기도는 가족정책 계획(2006~2010) 수립연구를 진행하여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과 일·생활 균형 증진을 목표로 한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하였으며 최근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1~2025)과 경기도 가족 형태 변화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함. 또한 충청남도는 2016년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좋은 충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충남을 목표로 한 ‘충청남도 가족정책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한 바 있음. 최근 수립된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 비전은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경기이며,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기반 조성, 모든 가족의 역량 강화·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돌봄 지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등 4개 핵심 정책을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115억6,500만원으로 추산되고 4개 핵심 정책, 22개 세부과제, 5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참조

3-1-2

가족정책 전달체계 구축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지역의 모든 가족을 위한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운영과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의 발굴과 정책·사업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함
- 제주는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제주형 수놓음육아공동체 발굴과 지원, 수놓음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 있음
- 앞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족친화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운영 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모든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맞춤 지원을 위한 정책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가족돌봄협의체 네트워크와 마을돌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가족서비스 전달 인력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강화 정책 발굴, 직원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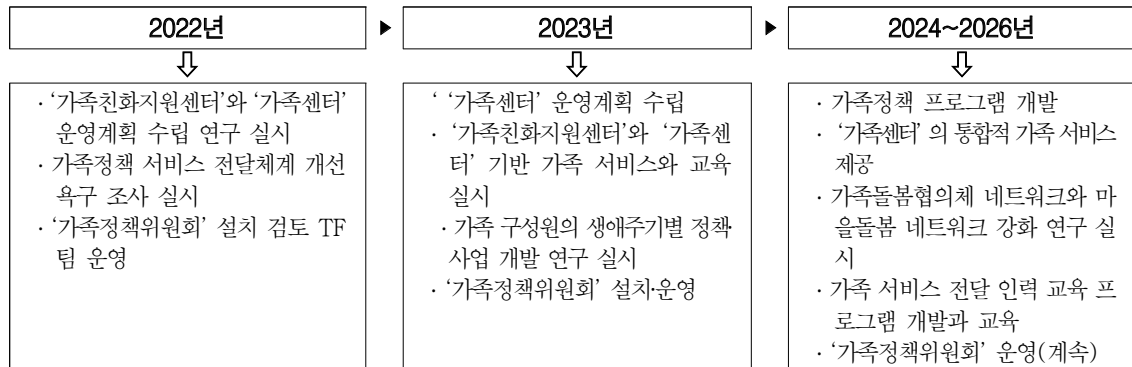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가족친화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운영계획 수립과 효율적 운영¹⁹⁾
-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가족정책위원회' 설치²⁰⁾
- '가족친화지원센터'와 '가족센터' 중심의 가족 역량 강화 교육
- 가족돌봄협의체 네트워크와 마을돌봄 네트워크 강화
- 가족 서비스 전달 인력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가족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 가족 다양성 지원 부서 공무원 및 가족정책 및 서비스 전달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가족 다양성 인식개선 교육
- 가족정책 서비스 전달 부서·직원의 처우개선(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신설)과 역량 강화 교육

19) 경기도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군의 건강가정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가정 '광역가족센터'를 설치할 계획임. 이는 여성가족부가 2021년 10월 13일 '건강·다문화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해 모든 가족을 위한 통합적 가족 서비스 지원 센터화하면서 이를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한 것임

20) '가족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가족정책 관련 심의 및 기획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족정책 중장기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가족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사각지대의 보완이 가능함

□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성평등정책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가족센터(구 건가·다가지원센터), 가족친화지원센터

3-1-3

제주형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족 서비스 제공 및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를 반영한 가족정책 과제 개발과 가족 역량 강화 및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포괄적, 체계적 사업 발굴을 강조하는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욕구 수렴에 기초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선택에 대한 권리보장과 이에 기반한 통합적인 가족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특히 제주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가족’* 구성의 제도적 근거와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특히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1인 가구, 국제·국내 이주민 가족 등 지역의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 ‘사회적 가족’: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지칭.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임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보완개정
-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에 따라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 청년1인 가구, 중장년1인 가구, 노년층1인 가구, 남성1인 가구, 여성 1인가구 등 1인 가구의 특성과 정책 수요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1인 가구 정책 개발
 -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성남시 추진 사례 참고21)
-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조례’ 제정 * 서울광역시 양천구 사례 참고22)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조례’ 제정
-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제정23) 및 성인지적 관점의 사업 추진

21) 서울특별시는 2019년 지자체 중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를 가족의 한 유형으로 보고 1인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본격 가동했고, 광주광역시도 2019년 기준 광주시의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서면서 그해 10월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광주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업 TF팀을 운영해왔음. 성남시도 2020년 2월,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22) 2020년 10월 말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운영, 사회적 고립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역량 강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사회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해왔음

- 고령장애인지원계획 수립,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평가 등 실시
- 건강증진·돌봄 및 돌봄가족지원, 주거지원, 평생교육, 폭력 대응체계 구축 등 추진

○ 가족 다양성을 반영한 마을중심 돌봄 지원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시설을 활용한 돌봄·여가 공간 마련
- 돌봄정책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공간을 확충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신규 돌봄 수요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 연차별 추진계획

2022년	2023년	2024~2026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조례’,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다양한 가족 관련 지원조례(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조례) 등의 제정 ·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손가정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 기존 조례 검토와 보완개정 TF팀 구성 · 제주 특성 반영한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 수립 연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정책사업 발굴 ·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 국내이주민 가족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발굴 연구 실시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실시 · 1인 가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및 마을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실시 · 마을 단위 가족·돌봄협의체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기본계획’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도교육청과의 협력) 실시(정기) · 성 평등가족 및 가족 다양성 캠페인 실시 · 마을 시설을 활용한 돌봄·여가 공간 운영 · 마을 단위 가족·돌봄협의체 운영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도 유관 부서,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²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가족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보건소, 마을공동체, 복지관, 지역의 다양한 가족/여성·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 간 협의체(구성)

23) 2021년 5월,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조례’가 제395회 임시회에 발의(강철남 의원)된 상태임

24)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조례’를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도교육청과의 협력하에 입양,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기타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

2) 돌봄·가족 친화 환경 조성

3-2-1

마을중심 가족·돌봄 생태계 구축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의 경우 맞벌이 가구 비중이 약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코로나 19로 학교와 돌봄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함
- 코로나 19로 전국 아동·청소년들은 평일 낮 시간대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른 초등학생이 46.8%에 달했으며(정익중, 2020a에서 재인용), 제주지역의 경우 코로나 전(37.9%)보다 현재 (44.8%) 직접 돌봄 응답 비율이 6.9%p 더 높고 돌봄 대안을 찾지 못한 경우 '자녀 혼자 두고 출근' 한 것으로 나타남(손태주 외, 2021에서 재인용)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면서 공적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많은 가정들이 아동돌봄 위기를 경험함
- 정부와 지자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해 학교와 마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 대상을 늘리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하지만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적절한 공급환경을 만들지 못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돌봄 뉴딜 방안 연구」(손태주 외, 2021)결과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마을단위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도출됨.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는 돌봄 추진체계 정립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마을돌봄 생태계 조성, 지역돌봄 네트워크 강화 순으로 나타남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민선 8기 도정은 가족과 아동 돌봄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 생태계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 및 마을과 마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전달체계 강화, 마을의 자원 활용, 생애주기별 돌봄·다양한 가족 돌봄 등 마을중심 가족·돌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돌봄 추진체계 정립을 위해 법·제도 기반 및 추진체계 방안 모색 필요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제정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교육청 연계 제주아동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해 마을 방과후 연계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필요

- 돌봄 활동을 위한 학교 및 마을 유휴 공간 발굴 및 운영지원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 공백 아동 기관연계 지원
- 지역중심 돌봄 나눔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 소통과 연대를 위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학교 돌봄 및 마을 돌봄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돌봄 협의회 운영 활성화
- 방과후 돌봄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 연차별 추진 계획

2022년	▶	2023년	▶	2024년~2026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지원조례 제정 · (가칭)제주아동돌봄지원센터 준비협의체 구성·운영 · 방과후 돌봄협의회 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교육청 연계 제주아동돌봄지원센터 운영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지역별 돌봄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 마을 자원 발굴 조사 · 돌봄협의회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교육청 연계 제주아동돌봄지원센터 운영 · 홈페이지 운영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 지역별 돌봄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 마을 자원 발굴 및 방과후 활동 연계 지원 · 돌봄협의회 운영 활성화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방과후 돌봄 유관기관

3-2-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복지 추진체계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9)에 근거해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실시했으며 2021년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를 비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5개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만 수립했을 뿐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도 없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결과 보호자의 45.6%는 제주도가 아동의 권리가 반영된 법과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을 아동친화도시 팀과 아동복지팀으로 분리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더욱 제주지역 아동학대 발생률을 낮추고 예방과 대응정책 추진을 위해 아동복지팀에서 집중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한 신고접수건수는 총 41,389건으로 전년대비 약 13.7% 증가했으며 제주의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 959건으로 전년대비 약 1.6% 증가했음. 코로나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 여성, 노인 등 약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민선8기 도정에서는 아동친화팀을 아동친화도시팀과 아동복지팀으로 나누어 추진체계를 강화해 아동친화도시팀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을 담당하게 하고 아동복지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을 강화해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팀 구성 및 인력 확충
- 제주시와 서귀포시 아동친화도시 전담 인력 확충
- 아동복지팀 아동학대 조기발견시스템 운영·내실화 및 학대예방교육·아동인권교육 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2022년	▶	2023년	▶	2024년~2026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 아동복지팀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운영 및 학대예방교육·아동인권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팀 구성 및 인력확충 · 제주시 아동친화도시 전담인력확충 · 서귀포시 아동친화도시 전담인력확충 · 아동복지팀 아동학대 조기발견시스템 운영·내실화 및 학대예방교육·아동인권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도시팀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 · 아동친화도시팀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준비 및 인증획득 · 아동복지팀 아동학대 조기발견시스템 운영·내실화 및 학대예방교육·아동인권교육 강화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시, 서귀포시

3-2-3

도민 돌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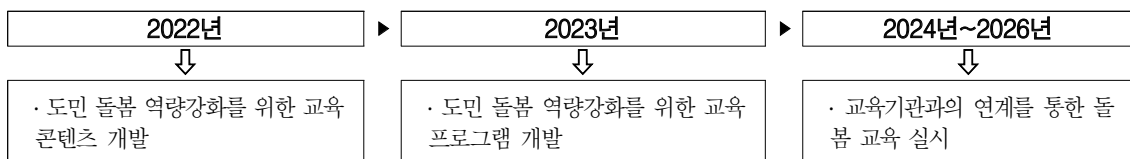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근거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모든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공적 돌봄이 강화될 것임. 더불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취약가족, 장애아동 돌봄, 다문화 가정 아동 돌봄 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2019)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여성 3시간 7분, 남성 54분으로 여전히 가사·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앞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보장,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며, 타인을 돌보는 돌봄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돌봄, 특정인이 돌보는 돌봄에서 누구나 돌봄을 할 수 있는 '돌봄을 받을 권리,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민의 돌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도민의 돌봄 역량을 강화할 교육콘텐츠 개발
-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돌봄자가 될 수 있도록 돌봄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기관과의 연계로 통한 도민 대상 돌봄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운영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교육관련 유관기관

3)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3-3-1

일·생활균형지원 조례제정 및 지수 관리

□ 사업 배경 및 목적

- 통계청(2020)의 사회조사결과 최근 개인 삶의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 및 개인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균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일 우선: 남성('11년) 54.4% → ('19년) 42.1%, 여성('11년) 42.4% → ('19년) 33.9%
 - 일·가정 비슷: 남성('11년) 29.3% → ('19년) 40.3%, 여성('11년) 41.2% → ('19년) 49.5%
-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해 각 지자체에서는 일·생활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타 시도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제·개정 구분
1	경기도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9.	제정
2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2020. 12. 17.	일부개정
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2021. 4. 9.	제정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2019. 7. 10.	일부개정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2021. 3. 15.	제정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6.	제정
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2021. 7. 15.	제정
8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11. 4.	전부개정
9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0. 7. 6.	일부개정
10	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2019. 8. 1.	전부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1.11)

- 더욱 정부는 2017년부터 해마다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생활의 균형정도를 보여주는 일·생활균형지수를 발표해오고 있음
 - 일·생활균형지수: 일(22.1점), 생활(30.1점), 제도(25.0%), 지자체 관심도(22.8점)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일영역에서 4위(13.7점), 생활영역에서 1위(18.3점), 제도영역에서 5위(14.0점),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6위(10.6점)로 일·생활균형지수는 2위로 평균 56.7점으로 전국 평균 50.5점보다 높게 나타남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해 「일·생활균형지원 조례제정」 및 일영역, 생활영역, 제도영역, 지자체 관심도에 대한 점수를 높여 지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제주지역 일·생활균형 지원조례제정 및 제주형 일·생활균형기본계획 수립
- 일·생활균형지수 산출 세부지표관리

영역(배점)	세부 지표(24개 지표)
일(22.1점)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30.1점)	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시간, ⑥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⑦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제도 (25.0점)	①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지자체 관심도 (22.8점)	①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③담당조직 유무 ④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 연차별 추진 계획

2022년	▶	2023년	▶	2024년~2026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일생활균형 지수 관리·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균형기본계획 수립 · 일생활균형 지수 관리·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일생활균형 사업 추진 · 일생활균형 지수 관리·향상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3-3-2

일·생활균형 지역네트워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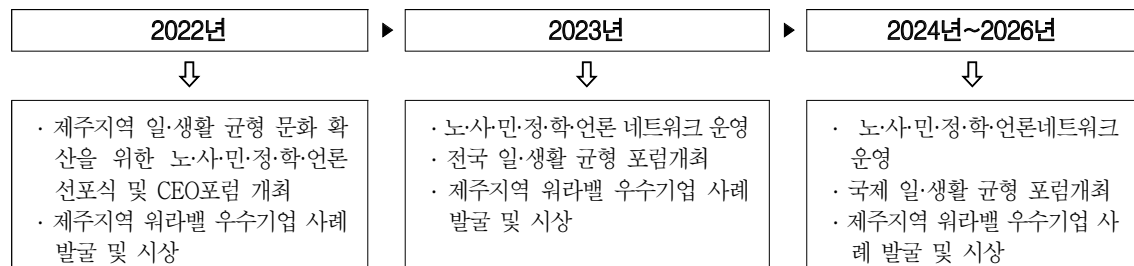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와 정책방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성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부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직장문화, 휴직·휴가 시 대체인력부족으로 나타남
- 남녀모두가 일하면서 돌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기업주와 남성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함
- 제주지역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민·정·학·언론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련 의제를 발굴·실천하고 국내·국제적 행사와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인식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제주지역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학·언론 네트워크 구축
- 제주지역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학·언론 선포식 및 CEO포럼 개최 및 운영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국내외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가족친화지원센터,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시·서귀포 소상공인연합회

3-3-3

영세사업체 · 여성 집중기업 가족친화 인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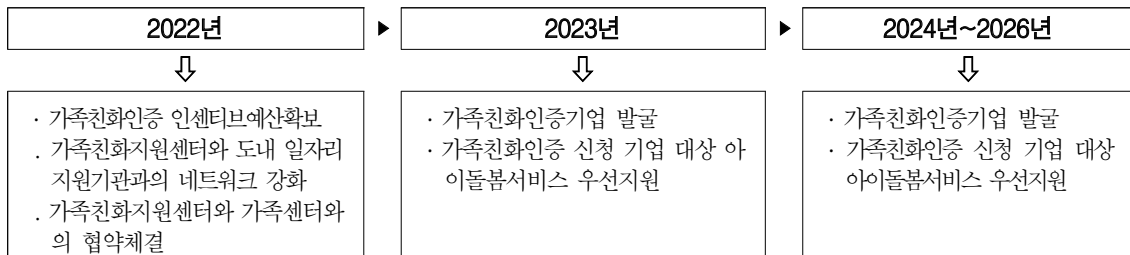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1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3.4%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전체 사업체 일자리의 48.1%를 차지함
- 제주지역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지역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비율은 8.7%에서 12.7%로 증가함
- 제주지역의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영세사업체와 여성 집중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일·생활균형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사업체가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 발굴
-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 대상 가족친화기업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
-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업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라.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 및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1) 여성 일자리 정책 기반 강화

4-1-1

여성일자리 정책 전담팀 및 인력 확충

□ 사업배경 및 목적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의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부서 없이 “여성권익정책팀” 아래 사업 담당 인력 1명이 여성 고용, 일자리, 여성 인력개발, 여성 단체 지원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종합적인 제주 여성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여성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필요

□ 사업내용

- 여성일자리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협의
 - 여성일자리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한 타당성 의견수렴, TF팀 구성 등 협의
 - 여성일자리 전담 부서 및 인력 확충 계획 수립, 추진
-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팀’ 설치, 업무 분장, 인력 배치
 - 제주여성 일자리 장단기 정책 수립
 -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 및 성과 관리
 - 여성 일자리 지원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통합 관리, 협력 업무
 -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간, 인프라 등의 물리적 자산 확보 및 관리
 - 여성 일자리 정책의 성 주류화 기획·관리

□ 연차별 추진 계획

2022년 ↓	▶ 2023년 ↓	▶ 2024~202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견수렴 · 조직개편 TF팀 운영 · 전담부서 설치 모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 전담팀 및 인력 확충 · 제주여성 일자리 정책 수립 및 담당자 배치 · 관련 부서, 유관기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 정책 성과 분석, 모니터링 · 정책 환류 강화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일자리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1-2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

□ 사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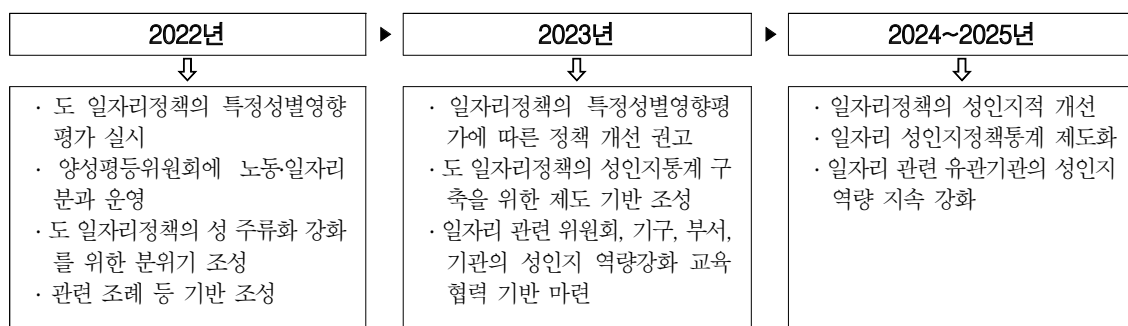
- 그동안 성평등한 노동시장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주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 10년 간 볼 수 없었던 50%대로 하향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이를 위한 지자체-기업의 협력이 확대·강화되어야 함
- 2020년 기준, 제주지역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6.7%에 그침.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임금공시제 도입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와 실행력을 갖추어야 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일자리 로드맵에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일자리 정책성과를 성별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여 일자리 정책의 성인지적 성과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성평등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 수립과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성평등 채용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도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성평등 채용, 여성 인력 수요 등에 대한 실태 조사
 - 성평등 채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식 확산 : 공공기관 모니터링,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토론회, 교육, 캠페인 등)
 - 도내 공공기관, 기업 대상 성별 균형 인사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현장지도 추진
- 성별 임금공시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상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방안 마련
 - 성별 임금격차 개선 TF팀 운영, 관련 조례 및 추진 방법 정립
 - 조례, 추진 시스템, 위원회, 추진 부서 등 정립
 - 성별, 연령별, 직급별 등 임금공시 기준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인센티브 마련
 - 성평등 임금 컨설팅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 찾아가는 성평등 임금실천 상담
 -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의 성 주류화 실천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발
 -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른 제주도 일자리정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의 성인지 통계 구축
 - 제주도 일자리 로드맵에 의해 운영되는 일자리 정책(참여자, 수혜자)의 성별 통계 구축
 - 일자리정책의 성인지정책 통계 구축의 제도화 및 추진체계 정립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관련 위원회의 여성 일자리 정책 조정 기능 및 관심 제고
 - 양성평등위원회의 여성 노동일자리 협의·조정 기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 일자리 정책 관심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관련 기구, 부서, 기관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일자리과, 예산담당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 여성일자리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4-2-1

대상별 직업교육훈련 개발

□ 사업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에 따른 새로운 경험은 일하는 문화와 제도까지 바꾸어 뉴노멀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훈련 방법을 적용하여 미래 인재 육성의 구체적 방향을 설계하고 구현 할 필요성 대두됨
- 대상별 분야별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대상자별 직업교육훈련의 접근성, 질적 수준 등 격차 발생
- 이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의 대상별 맞춤 직업교육훈련 직종 개발 요구됨

□ 사업 내용

- 제주지역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현황과 취업 실태조사 실시
 - 여성 전문 직업교육 운영기관,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조사 추진
 - 지역별 상황 파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결과 도출
- 경력단절여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종 개발
 -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후 대상별 구직여성의 수요와 제주 특화 산업에 맞는 직종 개발

※ 직업훈련 대상별 구분

- 20~30대 여성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기반 기술집약형 훈련 등
- 30~40대 여성 :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기반 훈련 등
- 50대 이상 여성 : AI 레이블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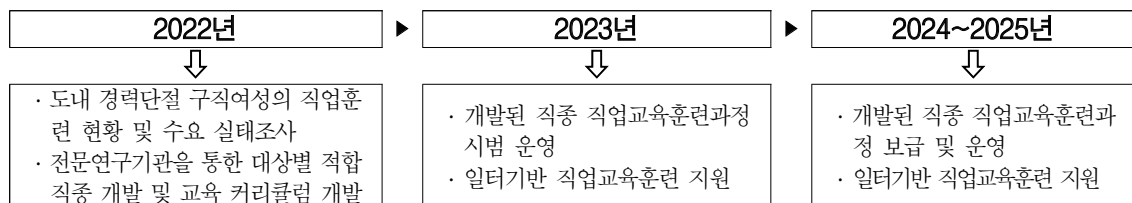
○ 새로운 직종의 직업훈련 시범운영

- 단계: 직종개발->시범운영->평가 및 피드백->적합직종 보급 및 운영

○ 고용유지를 위한 일터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

- 사내교육, 재직자훈련, 일터학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디지털 전환교육, 홍보미디어 교육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부서(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4-2-2

여성 직업훈련기관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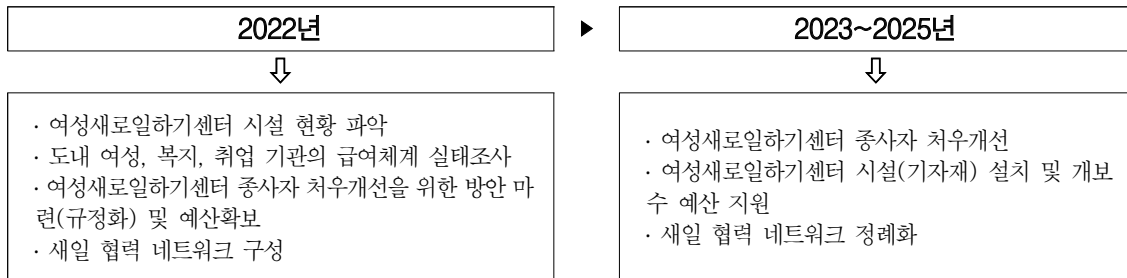
□ 사업배경 및 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 제주시1곳, 서귀포2곳이 운영해오고 있음. 기관이 아닌 프로젝트형 지원으로 새일센터 운영 여건이 매우 열악함
- 새일센터 채용조건에 따른 유사직종과 비교 시 처우가 낮고, 매일 고용정보를 다루는 직업적 특성 불 때 이직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급여 체계 개선을 통한 고용유지와 장기근속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지원확대가 요구됨

□ 사업 내용

- 여성 직업훈련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지원
 - 건물 노후 개보수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시설 인프라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유사계열 도 내 기관 종사자 급여 체계 비교 조사
 - 새일센터 급여체계 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 새일센터 사업 운영 안정화를 위한 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새일센터지원협의회 구성 및 정례화(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3) 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

4-3-1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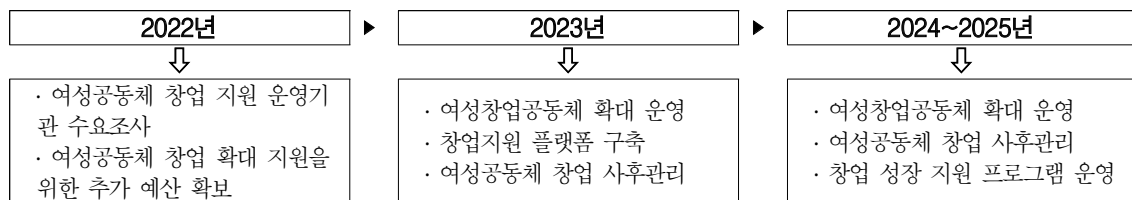
□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 공동체 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제주형 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과라 볼 수 있음
- 향후 여성창업공동체 사업의 체계화를 위하여 전담 창업 보육 매니저 배치, 사후관리, 공간 지원 등의 사업 지원 확대가 필요함. 또한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조직 플랫폼 운영기관이 제주시내에 위치해 서귀포에서 창업을 준비할 경우 상대적 거리감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후 지속적인 컨설팅 등 참여가 제한되고 있어 서귀포에도 운영기관이 필요
- 여성공동체 창업을 확대 지원하여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창업 생태계의 중심점이 마련됨으로서 전국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사업목표 : 여성공동체 창업지원 확대·강화
- 추진내용
 - 여성공동체 창업 후 사후관리 강화
 - 여성 창업기업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원
 - * 지원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매니저 구성으로 지속적 성장 모니터링 강화
 - 여성 창업지원 로컬인프라 공유플랫폼 구축
 - 단순히 공간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컬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기존 창업자와 신규 창업의 코워킹이 가능한 공유플랫폼 구축
 - 여성공동체 창업지원 기관 확대 - 제주시, 서귀포시 2개로 확대 지원
 - 사업의 행정 지원 및 예산 지원에서 확대하여 초기 창업 단계에 있는 여성 창업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후관리를 돕기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지원이 가능해짐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4-3-2

지속가능한 여성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사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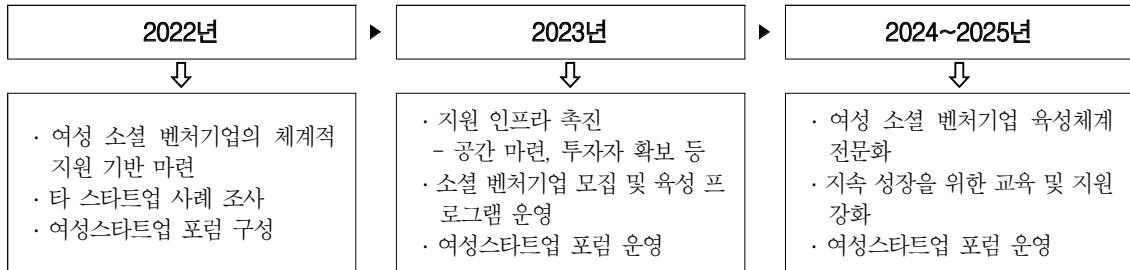
- 제주지역 여성들은 식당, 숙박 등 과거 생계형 중심으로 창업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기존의 창업으로는 한계가 발생되고 있어 여성 혁신 스타트업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여성 스타트업 분야로서 소셜벤처는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신창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함
 - 국내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셜벤처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1,500개사 정도가 있으며, 이중 여성 스타트업 비중이 24.8% 수준으로 매우 높음 수준임
 - * 국내 벤처기업 중 여성 스타트업 비중은 2.9%(2019년 기준) 수준임
- 제주지역 내에서도 최근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인권,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테마로 한 소셜벤처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행정기관,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도민 인식이 타 지역 대비 낮고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소셜 벤처 스타트업 들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 스타트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여성스타트업 포럼 구성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책 발굴
- 여성스타트업의 결합과 지역기업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제공
(예, 군산 프랜들라-로컬 커뮤니티호텔, 지역식당, 지역세탁소, 가게, 목욕탕 등 지역 연계 모델 제시) *청년여성 대상 시범사업 운영
- 여성 소셜 벤처기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여성친화형 소셜벤처 육성 강화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여성 친화적 소셜벤처 기준 마련, 지원 정책의 평가, 환류 기준 마련
- 여성 소셜 벤처기업의 지원 인프라 강화
 - 여성 소셜벤처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지원하는 여성친화 창업 공간 조성
 -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강화
 - 임팩트 투자자 수요조사, 모집, 투자 촉진 시스템 마련
- 여성 소셜 벤처기업의 체계적 전문적 육성지원 강화

- 로컬자원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 소셜벤처 육성 지원
-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인프라 강화, 육성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 창구 마련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미래전략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4-3-3

여성창업지원 공간 확충

□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주도내에서 여성들이 창업하기에 좋은 아이템이 많고, 창업형태는 아니지만 이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보, 네트워크가 부족함.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생존과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필요 있음
- 여성들은 육아, 보육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신감 등으로 함께 지지 가능한 공간 마련과 더불어 창업 및 정보 교류의 장이 되어 여성 창업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 필요

□ 사업 내용

- 창업지원 공간 수요 조사
 - 여성 전용 창업지원 가능 공간 검토
 - *신규공간이 아닌 기존 공간 활용-일반형 새일센터 공간 추가 지원 검토 가능
 - 복합적인 창업공간으로의 지원
 - *기존 여성 구직자 및 창업 준비자의 접근성 높임
- 창업 지원 공간에 대한 구체화 및 예산 마련
 - (창업실험실) 공유 사무공간 / (공용공간) 세미나실, 상담실 등의 이용 / (교육·컨설팅) 창업 및 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홍보·마케팅) / (네트워킹)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진행
-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기업 성장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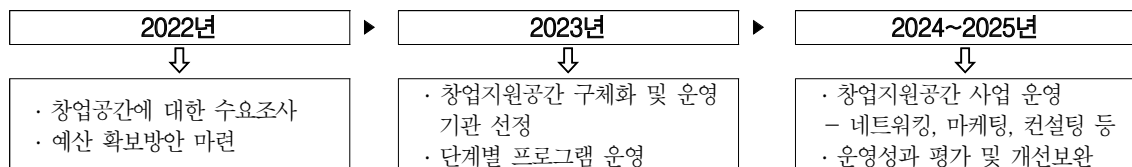


다양한 공간지원



여성창업 저변확대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4-4-1

디지털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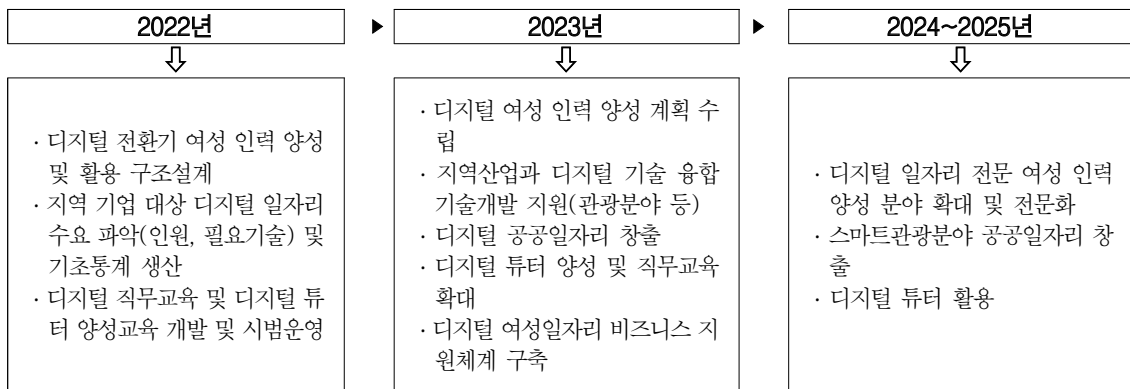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산업 전반에 걸친 자동화의 가속화로 대면서비스업에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여성에 대한 디지털 일자리로의 전직 지원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함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의 비약적 발전과 부문 간 융합으로 산업 전반에 기술변화는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제주지역 산업에 특화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여성 일자리 창출로 미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디지털 전문 여성인재 양성이 필요함
- 더불어, 디지털화 가속에 따른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장되고 있어 이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재직여성의 디지털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변화하는 미래 일자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디지털 일자리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원하는 시간에 참여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의 특성이 있고, 제주라는 지역 특성을 넘어설 수 있는 일자리로 확장 가능함. 초기 AI레이블링 작업처럼 저숙련 디지털 분야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아 전문기술 보유도가 높지 않은 청년 및 중장년 여성의 디지털 일자리 진입도 가능하고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사업목표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신규 디지털 일자리 창출(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분야, 디지털 튜터 등)
- 추진내용
 - 디지털 전환기에 미래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구조설계
 -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단계별 여성인력양성과 핵심 산업분야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일자리 여성인력 구조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생산
 -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제공에 따른 공공 일자리 또는 인턴십 지원
 - 트래블테크(Travel+Technology, VR, AR기술, ICT 첨단 서비스,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제주특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제주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 디지털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및 디지털튜터 양성
- 경력단절여성 및 재직여성의 디지털 직무교육(200명 이상)
 - 디지털미래 사회 대비 디지털 튜터 양성 및 활용(튜터 20명, 도민교육 500명)
- AI레이블러 등 디지털 여성일자리 비즈니스 지원체계 구축
 - 빅데이터 전처리 및 레이블링과 관련한 저숙련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 장벽을 낮추는 고용정책 검토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일자리과, 관광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역 대학, 지역 기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에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임
 - 자연문화유산해설, 친환경관련 분야, 관광분야 등 여성 인력이 편중되어 있는 산업분야, 즉 이와 연계하여 제주의 가치를 지속하는 여성 일자리 분야의 개발이 필요함
- 제주의 가치인 자연경관을 활용한 1차 관광에서 코로나19 및 삶의질 향상으로 2차적 웰니스 관광으로 변화하기 시작함. 명상, 힐링, 돌봄, 휴식, 관리등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웰니스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해 여성 일자리 개발을 지원함
- 미래 여성일자리에 여성의 미진출 분야를 발굴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미래여성일자리에 맞는 여성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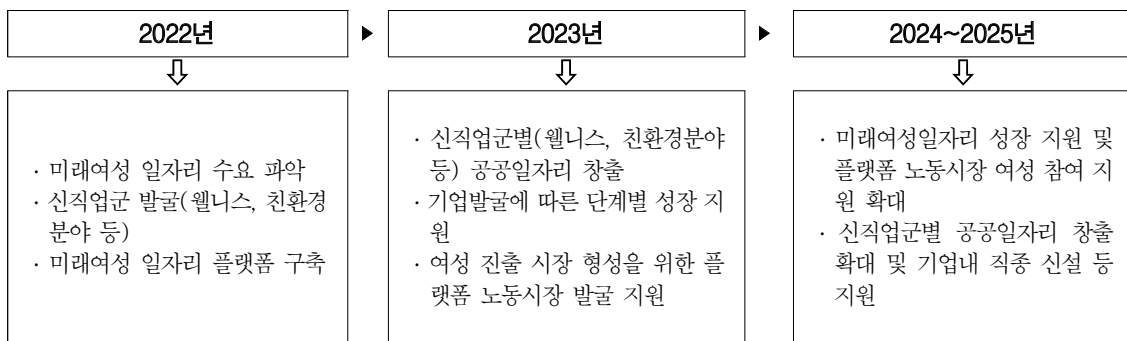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사업목표: 제주 가치를 담은 신직업군(친환경, 웰니스 관광분야) 개발 및 공공 일자리 창출, 미래 여성 일자리 적합 플랫폼 구축
- 추진내용
 - 제주 가치와 연결 가능한 여성 미래 일자리 수요 파악
 - 자연문화유산, 친환경, 관광분야 DNA 생태계 강화
 - 친환경분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개발
 - 전문화된 업사이클 일자리, 저탄소농업 및 친환경산업 전환 일자리 등
 - 웰니스 관광 기업 발굴 및 일자리 연계 지원
 - 의료, 요가, 트레킹, 테라피, 요식업, 원예치유 등 다양한 산업 연계 모델 구축
 - 기존 웰니스 산업의 전문화 및 신규 콘텐츠 발굴(예: 서귀포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전문화 하는 방안 마련 등)
 - 미래 여성일자리 적합 플랫폼 구축
 - 예: 교육, 배달, 돌봄 영역 등 여성의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여성의 유연한 일자리 참여 구조 지원

<서귀포 치유의 숲>자연+음식+해설 등 결합

구 분	주 요 내 용	
개장연도	• 2016년	
부지면적	• 약 174만㎡	
주요시설	• 힐링센터, 건강죽정실, 다담실, 힐링하우스, 편백나무 침대, 산도록 숲 야외무대 등	
운영코스	• 가명오명 숲길, 가배포종 치유숲길, 벤조종 치유숲길, 숨비소리 치유의 숲길, 오고생이 치유숲길, 쉬멍 치유숲길 등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내 최초의 치유의 숲으로 심신의 회복과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한 산림 • 치유 마을 호근동과 연계하여 차롱치유 발상 판매, 마을 힐링해설사 운영 등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사업 병행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관광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4-3

워라밸 일자리 확대

□ 사업배경 및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유연근무제와 워라밸 문화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와 기업의 공감대가 큼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확대 지원하며 노동조건과 조직문화 개선, 디지털 역량 강화 직업교육 훈련 확대, 프리랜서 지원 정책 확대 등이 필요
- 특히, 청년 여성의 이직 사유 중 장시간 근로 등 근무환경의 사유가 가장 비중이 높고 고용유지를 위한 워라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생활 균형 제고

〈청년 이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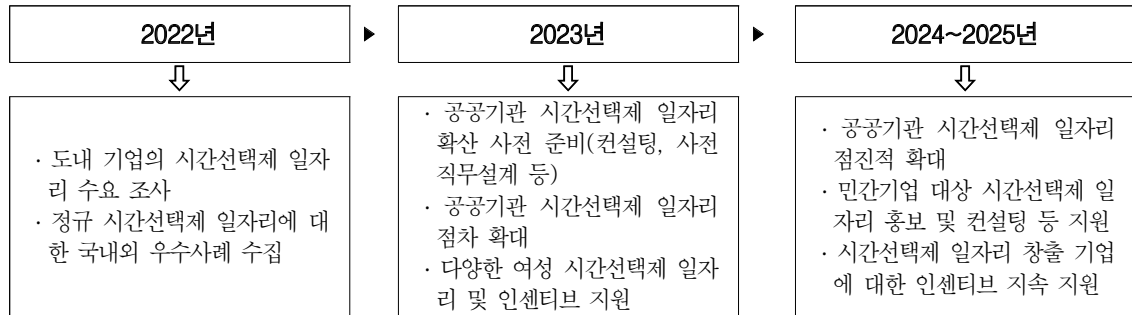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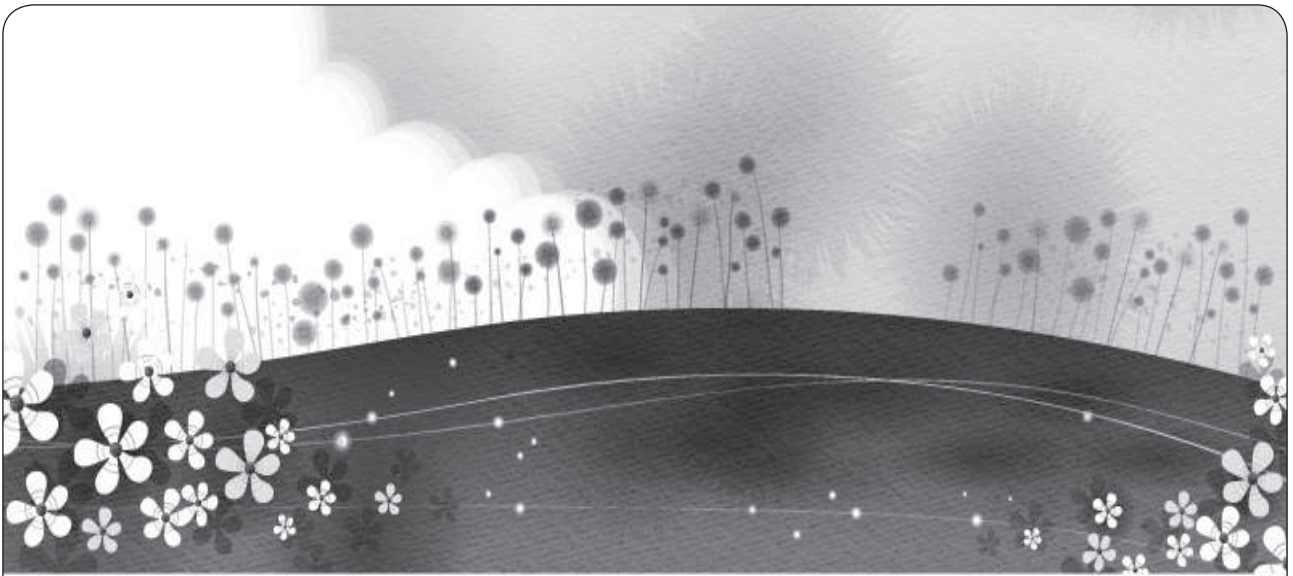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 및 수요 조사 실시
 - 도내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정책 수요 조사 실시
- 민간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직무 설계를 위한 사전, 사후 전문 컨설팅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 근무 확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유연한 근무형태의 일자리 확대 제공을 통한 잠재 여성 인력 활용
 - 퇴직교육 및 공무원 인적자원 활용
 - 고학력 여성의 전문 일자리 선택 근로 가능
- 기업의 워라밸 확산,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홍보 캠페인 등 지원 확대
 - 직원복지, 직원성장, 유연 근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녀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토론회

좌 장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학장)

토 론

-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홍부경(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 김현주(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수놓음돌봄활동가)
- 진관훈(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 강성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성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강 호 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발제문 관련한 의견

- 주관적 입장이지만 발제문은 전체적으로 민선 7기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고 생각됨.
- 평가와 함께 안전, 인권, 건강 정책에 대한 정책과제들은 다음 도정에서 중요한 성평등 의제로 채택되고 세부적으로 정책화할 필요가 있음.
- 민선 8기 성평등 정책 4개 정책영역, 14개 전략과제, 39개 세부추진 과제도 적절하게 설정했다고 보임. 공직사회 특성을 감안해 BSC 반영도 관철되어야 할 과제임.
- 일자리재단 설립 등이 보류되는 사례를 감안해 여성재단 설립, 제주역사문화연구센터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과제별로 소요 예산 및 중기 투입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
- 사족이지만 비전으로 제시한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 중 ‘평화도시’ 단어는 어색함.
- 행정정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표현은 수치화된 예산이 99%임. 그러나 발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성평등정책관실의 예산은 0.35%에 머물렀고, 보육, 아동, 청소년업무까지 포괄한 예산까지 성평등정책 예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양적인 예산 규모가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라는 점은 여전히 한계임(이와 관련한 통계 논쟁이 있어서 세부 검증은 필요함).

■ 민선 7기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 평가

- 성주류화와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 등이 이뤄지는 등 제도적 틀 마련이라는 성과적인 측면이 존재함.
- 실제 체감적으로 행정차원의 성주류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사업의 경우 제주는 비교적 제도화의 틀을 넘어서 초입을 지난 정착단계로 중간과정에서 있다고 봄.
-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이라는 것을 지향이라고 한다면 2021년 도 민사회에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이 대중화를 이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 성평등정책관실 신설,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양평교육센터, 공공기관 성평등 협의회 등을 통해서 행정 관련 정책과 경험이 쌓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파급력이 관공서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지는 평가가 필요해 보임.
- 실질적인 생활현장에서 대다수인 여성노동자 문제(경력단절, 돌봄), 여성농어업인들이 직면한 저임금 구조, 사회적 차별 문제 해결에까지 구체적인 정책의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 운동의 주체측면에서는 도청, 의회 여성의원, 일부여성단체 중심적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질적인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했으며, 일부사업은 <언론용 정책>에 머물렀다고 보임.
- 예산투입과 관련해서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처럼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도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정책연구나 분야별 사업은 필요하나 과도한 '공기관대행'에 대한 합리적 조정도 필요해 보임.

■ 성주류화 및 성평등 과제

- 정치의 영역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국면에서 성주류화 및 성평등 과제를 전면화할 기회임.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정치구조를 타파할 의제 확산이 필요함.
- 지역구 여성, 청년 30% 할당제 등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 제도화가 안 되더라도 기존 정당을 압박해서 견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도 필요하지만 여성부지사 신설 등 상징적 정책 이슈를 개발, 공론화가 필요함.
- 최근 풀뿌리 자치분야 정책으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200억에서 1000억 확대 등이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내가 낸 세금, 우리가 바로 쓰자'의 관점에서 여성참여예산제 등등을 정책화,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및 여성권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예산은 0.17%이라는 수치에서 알 수 있는 관련 예산의 양적 증가는 필수적임
- 특히 행정 예산에서 그동안 각계 각층의 노력과 정책당국의 결단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 20%, 문화분야에서 예산 3% 확보 등을 이뤄낸 만큼 <성주류화 및 성평등 예산/보육,청소년 예산 포함 10%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의제 설정과 현실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발제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생활의 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여전히 약자인 <노동의제>를 부각 시킬 필요가 있으며, 여성노동자 정책에 대해 구체화 전략(여성단체만의 아닌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결합 등을 통해서)이 있어야 할 것임.

여성 안전, 인권, 건강

홍 부 경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 연구의 의의

- 여성 인권·안전 기반 구축 및 건강증진 강화에 대한 다각적 방면으로 제안되었음
 - 제시된 연구내용들이 현 상황에 접목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입법화 문제와 정책수립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젠더폭력에 대한 다각적 대응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분원 설치 및 긴급피난처 확대 운영
 - 도내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은 상담소 및 이용기관은 12개소,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7개소로 유형별로 폭력피해지원 기관이 있음
 - 현재 여성의 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는 제주시에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있음
 - 서귀포지역에서 폭력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함에 있어,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발생
 - 지역의 한계성을 해소하고, 도내 전 지역의 위기 여성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분원 설치 필요
-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2014년도에 개소하여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고 있음
 - 2017.9.1.에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되면서 가정폭력상담을 본격적으로 지원함
 - 가정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이 긴급 분리·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내에는 이용할 보호시설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함
 - 발달장애인인 경우는 그나마 단기(1~2일)로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 신체장애인인 경우 도내에는 편의시설이 완비된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없어 타지역 보호시설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이 타지로 가는 불안함과 이동 등의 제약으로 포기하는 경우 있음
 -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이동권 확보가 어려움

- 현재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의 상담으로만 보면, 성폭력 피해자 유형과 달리 가정 폭력피해자는 장애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남
-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가 없다보니, 상담원들이 계속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장애인가정폭력피해 여성장애인시설은 광주의 가정폭력보호시설 1개소, 경기도에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1개소뿐임
- 장애 특성에 맞는 케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가정폭력보호시설 설치에 매우 절실한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2022-2025)에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음

<표 1>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가정폭력피해상담 실적(단위: 명, 건)

구분	2017 (2017.9.1.이후)	2018	2019	2020
실인원	12	18	36	24
건수	82	267	619	1,010

<표 2> 피해 장애유형 사례수(단위: 명)

장애유형 연도별	지체	뇌병변	뇌전증	지적	청가/ 언어	시각	정신	중복 장애	장애 의심	계
2017	5	3	0	4	3	1	1	1	3	12
2018	2	1	1	8	2	1	2	0	1	18
2019	8	1	1	20	5	0	1	0	0	36
2020	4	0	0	18	2	0	0	0	0	24

<표 3> 가정폭력피해 지원건수(단위: 건)

지원유형 연도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타시설 입소연계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기타	계
2017	38	-	-	8	-	36	82
2018	102	22	-	18	-	125	267
2019	365	8	1	10	-	235	619
2020	685	1	3	20	18	283	1,010

○ 폭력피해 여성의 자립지원 강화에 대한 문제제기

- 폭력피해 여성의 자립 정책의 전체 기조는 일시적, 단기간, 시혜적 지원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것으로 과연 제주도 내에서 여성이 주택만 마련하면 자립할 수 있는가?
- 자립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인가?

1. 주거정책 마련

1) 주거지원 정책

- 현재, 폭력피해 여성의 자립정책이 단기간, 일시적 지원 형태로 국한됨
- 주거는 인권의 문제이며, 폭력피해 여성 가족의 주거정책은 자립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임
-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2년 임대주택지원 정책) 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폭력피해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주거지원 정책: 매입임대,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의무 임대주택 대상에 폭력 피해여성 포함
- 예) 일본의 경우 '폭력피해 여성'에 가점제 도입하여 우선권 분양

2) 행복주택·주거복지센터 지원 대상에 포함

-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
- 행복주택 대상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을 명시함
- 이에, 폭력피해여성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식 필요
- 주거복지센터는 국가에서 하는 주거복지 개선 및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며,
- 그 대상에 '폭력피해여성' 포함

3)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자립정착금의 지원 인원 확대
- 자립정착금 금액의 확대 필요: 현재, 1인 가구~5인 가구 모두 일괄 500만원 책정됨

2. 일·가정 양립 정책지원

- '폭력피해 여성'이 자립할 때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이중 부담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폭력피해 여성'이 자립할 시기에 는 사회적 지지기반이 붕괴된 상태가 대부분임. 또한, 자신으로 인해 '원가족'이 보복의 대상이 될까봐 단절하는 경우도 많음
- 이에,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 예를 들면, 보호시설 퇴소 후 2~3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시행 등(현, 미혼모시설 입·퇴소자인 경우 1년에 한해 아이돌보미 무료 지원하고 있음)

3.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폭력피해 여성' 등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
- 기존의 직업훈련은 전통적인 여성직군에 한해 직업훈련 실시되고 있으며, 기간 또한 2~3개월로 자격취득이 가능한 정도로 지원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등등의 1~2년 직업훈련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훈련수당이나 인턴쉽 등을 통해 직업훈련 받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지원정책 필요

4. 폭력피해 여성 자활센터 설치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특수성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임.
- 가정폭력인 경우, 폭력에 노출된 후 전문지원기관과 연계되는 시기가 평균 10년이며, 가족 내 성폭력은 어릴 때부터 장기간 이루어짐. 성매매피해 여성의 경우도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이중·삼중의 피해 경험 많음.
- 자립을 위해 반드시 직업 취득은 필수지만 적응력을 키우는 방향은 필요
- 폭력피해 여성의 자활센터 설립을 통해, 전문 기술 습득, 직장생활 적응훈련, 사회성 훈련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향상 필요
- 이에, 3년~5년 정도의 활동 가능한 자활센터 설치하고, 그 과정은 인턴쉽을 통해 훈련과 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형태로 필요

□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지원 확대

○ 젠더폭력 예방교육 확대

- 지역내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의 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수당의 차별화 또는 기본수당외 추가 쿠폰 지원하여 교육을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
- 장애인 부모도 수급과 관계없이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자녀 학령기에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
- 부모들은 장애자녀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교육할 방법이 전무
- 피해 발생 후에야 교육을 지원하게 되어, 이 또한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 여성의 건강권 확대

○ 건강활동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8조(참여자 지원) ①도지사는 도민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현재, 보건소 등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과는 어떻게 차별화 되어질 것인가? 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 앱과 연동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여성의 안전권 강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안심 사업 추진
 - 여성1인가구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몇 년 전부터 제주경찰청에서 범죄 노출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방법창을 설치해 주고 있음
 - 제주경찰청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인가?
 -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 협력기관으로서 시청(주민센터등), 경찰청, 사회복지기관, 폭력피해지원기관등이 함께 해야 안전으로부터 취약한 가정을 파악하는데 용이함.
 - 현재 여성안심 4종세트 보급 사업처럼 신청창구를 일원화하여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 인식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김 현 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수놓음돌봄활동가)

제주는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제주형 수놓음육아 공동체를 발굴하였는데, 저희는 5년째 활동하고 있는 느나영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아이를 나만의 육아방식으로 키우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수놓음돌봄 사업을 알게 되었고 내 아이, 다른 이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이가 되어 돌봄을 나누고 양육자와 의지하며 육아의 지혜를 나누고 공동육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공동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수놓음돌봄활동가의 길에 들어서면서 느꼈던 좋은 감정, 감동, 육아의 지혜 등을 타 공동체들과 나누며 육아에 대한 간지러운 부분들을 끊어주며 공감하고 서로 배우며 활동가로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수놓음돌봄 활동가로서 타공동체 컨설팅 및 기획 등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아이 돌봄에 열심이었던 눈이 타 공동체로 시선으로 넓어졌고 육아 돌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놓음돌봄 형태의 공동육아 체계가 확산되어야 하고 꼭 필요하다라는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3-1-1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부분에 보시면, 2021년 10월 13일부터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 '느나영'이라는 공동체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라는 주제로 설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돌봄의 사각지대가 어디인가? 라는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돌봄의 사각지대는 취약한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을 떠올리는데 저희 양육자들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양부모가 있어도 아이들이 방치되

어지고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더라도 한부모 가족은 돌봄이 힘들고 비혈연 관계 또한 돌봄의 사각지대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족 형태 다양성의 시야를 넓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포괄적인 정책설계와 실행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의 발표원고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2-1 에 마을 중심 가족, 돌봄 생태계 구축에 대해 저희 실제로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지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가장 공감해온 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돌봄의 공백 및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마을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분명 현재 돌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믿고 활동을 했습니다.

올 7월에 노형초등학교 인근을 기반으로 ‘또또한동네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엄마활동가 및 노형초 양육자들, 그리고 상가주민과 함께 노형초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또또한동네만들기-함께 키워요’라는 팻말을 상가에 부착하고 상가주민에게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또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상가 주민들이 너무 흔쾌히 받아주셨고 모두 같은 양육자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형초 인근 놀이터를 활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아이들과 함께 동네놀이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책 읽어주기, 요즘 유행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동네놀이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맑게 즐거워했고 또 언제하느냐며 쫓아다니면서 질문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네 놀이터라는 마을 자원을 연계하고 마을 중심의 돌봄 활동을 해 보니, 발표원고(3-2-1)에 나와 있는, 민선 8기 도정은 가족과 아동 돌봄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마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 생태계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 및 마을과 마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전달체계 강화, 마을의 자원 활용 등 마을중심 가족, 돌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돌봄 활동을 위해서는 마을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돌봄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누군가라는 정해진 기준”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다”로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돌봄의 문턱을 낮추고 돌봄 공간에서 안전하고 다양한 활동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의 지역공동체 기반의 활동은 엄마 활동가 위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낯설고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위에 발표원고에 언급했듯이 공공 및 마을과 마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전달체계 강화, 곧 공권력의 부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협력 기반 구축 하에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마을중심의 가족돌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원으로 75개의 수놓음돌봄 공동체를 양성되어졌고 이는 공동육아로 육아분담뿐만 아니라 양육자들의 돌봄의 의식 수준이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육아의 양성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육아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돌봄 정책 사업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통감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발표원고 ‘3-1-1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민선7기 보건복지여성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여성권익정책, 가족친화, 청소년, 보육정책, 아동친화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족친화’ 업무 단위로만 가족 관련 업무가 분류되어 있고 가족정책 담당자는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이러한 돌봄정책의 대한 지원이 지속가능하고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75개의 수놓음돌봄 공동체를 발굴하며 성장시키는 과정을 활동가로서 지켜보았을 때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

그래서 관리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이 뒷받침될 수 있는 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육아팀이 발굴되어진 사례이고 나아가 지역기반으로 돌봄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동네가 한 아이를 키우듯이, 동네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지대가 된다면 육아 돌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족과 돌봄 관련 지역협의체 (마을 주민의 돌봄협의체) 및 도와 교육청의 협력기반 구축 강화가 필요함에 적극 공감하고,

돌봄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숙제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일자리 및 노동

진 관 훈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 무엇보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여성 창업지원 등의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체계가 확립되어 정책 기획, 추진, 관리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팀과 전담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또한 제주의 산업적, 환경적, 사회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그 특징을 반영한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전략 개발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도내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한 근무형태의 일자리 확대 제공을 통한 잠재 여성인력 활용(퇴직교육 및 공무원 인적자원 활용, 고학력 여성의 전문 일자리 선택 근로) 등
- 2020년 기준, 제주지역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6.7%에 그침.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추진 의지와 실천력이 요구됨. 참고로 1946년 11월 제주도 노무자들의 8시간 기준 1일 평균임금은 57.60원(전국 평균 79.60원에 비해 72% 수준)임. 성별 임금을 보면 남자가 1일 평균 60.86원 여자가 30.58원으로 2.0:1(전국 남자 90.89원 여자가 52.44로 1.7:1) 비율 임.
-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및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함. 먼저 제주여성문화·역사·교육 관련 기관의 방향성 논의를 위한 TF 설치와 운영이 요구됨. 특히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 특히 여성 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제주 여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사적 자료가 많이 발굴되어서 이를 아카이브화 하여야 함. 그런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이 기획되고 실천되어야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음. 이렇게 제주 여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적(史的) 자료를 토대로 형성된 정책이야말로 방향성과 역사성을 고루 갖춘 제대로 된 '제주형' 000 라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표 1> 제주지역 연령별 인구 (1948년 및 1953년, 단위: 천명)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48년	4.7	7.5	4.4	6.7	4.4	6.3	4.2	5.6	2.9	5.4	9.9	14.7
1953년	5.0	8.6	5.5	8.5	4.9	7.3	5.2	7.8	3.9	5.7	10.2	15.4

자료 : 제주도의회(2000), <제주 4.3 자료집-미군정보고서>.

○ 이러한 남녀 간 인 구비율의 격차는 결국 많은 성별, 즉 여성노동력의 강화나 착취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가계경제를 예로 들더라도 집안에 남자들이 없게 되면 그 빈자리를 여성들의 노동력 강화로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됨. 농사를 보더라도 여성노동력, 여성 일 역할이 많은 제충국, 고구마, 조 등 특수작물로의 재배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실제 1950년대 제주지역 농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여실히 나타났음.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남성의 역할을 여성이 하거나, 여성 역할이 많은 부분으로 제조업이나 공업이 특화되거나 하여 여성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생산 활동이 이어질 수밖에 없음. 심지어 이후 재건과정에서도 양잠이나 양마 등 주로 여성노동력 비중이 높은 분야에 집중투자하게 됨. 이러한 현상은 이후에도 나타남.

<표 2> 1953~1959 제주 도내 접객업소 통계

	1953년		1957년		1958년		1959년	
	북군	남군	제주시	서귀포	제주시	서귀포	제주시	서귀포
음식점	41	29	46	25	63	28	56	17
주점	-	-	-	-	2	4	8	6
다방	3	3	8	5	8	4	13	4
여관	19	26	20	14	20	12	26	21
하숙	3	-	6	3	5	7	-	-
미용	23	18	41	24	45	26	59	32
이용	7	6	22	15	4	2	33	18
목욕	4	2	3	2	3	3	5	2
병과	2	1	-	-	-	-	5	4
기타	11	11	-	-	-	-	호텔 1	-
	113	96	146	88	150	86	206	104

자료 : 제주상공회의소(2000), 『제주상의 65년사』, p. 254.

- 당시 제주 여성 진출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제주 도내 접객업소 통계를 살펴보면, 1953년 209(북군 113, 남군 96), 1957년 234(제주시 146, 서귀포 88), 1958년 236(제주시 150, 서귀포 86), 1959년 310(제주시 206, 서귀포 104) 등으로 '제주 4·3'의 회복기인 5년 사이, 대략 30% 이상 증가했음. 이를 '제주 4·3'의 회복기에 나타나는 숙박, 서비스업의 변화 혹은 산업의 변화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분야가 남성보다 여성노동력 진출이 활발한 분야라는 점에서 이 시기부터 여성 일자리가 늘어났고, 따라서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과제 : 민선8기를 위한 제언

강 성 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1. 제주도 양성평등정책의 유의미한 변화?

= 지역성평등지수의 변화가 있었는가? 대체로 양호하다..

제주가 전국 최초 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전국 최초 성평등 마을 컨설팅 사업 전개, 전국 최초 공공기관 성평등협의회 구축 등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제주지역성평등지수는 2016년까지는 중상위 등급이었으나 2017년 이후 상위등급을 유지 중이다. 다만 이를 지속할 과제가 산적했다”며 “양성평등 기금 확대 및 성평등 총괄 조정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성인지적 관점에서 의 정책 변화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 미디어 분야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과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 실시 규정을 통해 성평등 인식 도모 및 책임성 강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2021.9.5

= 누구의 관점과 입장으로 바라볼 것인가?

(도민, 도정, 의회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 또한 성별,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함.

틀을 바꾸는 유연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야 보다 현실적 반영이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세부적 지표에서 정량적 변화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정성적 변화는 무엇으로 살펴볼 수 있을지 궁금함. (도민의 체감도, 만족도??)

=> 안전하지 않은 제주도 / 불안한 지역/ 환경개선의 방안 필요

제주지역의 안전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인구대비 화재사망률과 범죄율이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안은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주지역의 인구 100만명당 화재 사망자 수는 17.9명에 이른다. 전국 최고수준으로 17개 시·도 평균(7.0명)보다 10.9명이나 많은 것은 물론 2위인 전남(12.5명)에 비해서도 5.4명이 많았다.

범죄율도 마찬가지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의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4294건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00건을 웃돌았다. 2016년 6051건, 2017년 5383건, 2018년 4613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 1위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형법 범죄도 2644건으로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 살인(3.2건), 강도(3.2건), 성폭력(77.2건), 폭력·상해(494.1건), 절도(490.6건) 등 5대 강력범죄는 모두 전국평균 이상으로 부끄러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범죄와 안전사고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3차 재공인을 받은 제주로서는 명성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제주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관광도시다. 범죄와 사고가 난무하다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없다.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제주도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2021.3.29

-> 언론에서 다뤄지는 폭력사건 등으로 인한 편견 강화(외지인=>외국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발생을 높고, 심각한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중대범죄 발생이유?)

=> 세대별 / 성별 갈등 유형은 지역적 특성이 없는지....

=>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빈부·정치·남녀...한국인 절반 갈등하며 산다

또한 여성(51.7%)보다는 남성(58.3%)이, 연령별로는 20대(62.9%)와 60대(63.9%)에서 사회갈등이 늘었다는 답변을 많이 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4.9%)과 서울(61.3%)에서 사회갈등이 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40대(41.2%)와 광주·전라(34.4%)에서는 갈등이 증가했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52.1%)에서 중간 계층(57.9%), 상위 계층(59.1%)으로 갈수록 사회갈등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지난 4년 간 가장 심각해진 한국사회 갈등 영역을 물었더니 빈부(34.3%)·정치(23.0%)·남녀(14.9%)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6.5%)·노사(4.4%)·지역(3.6%)·종교(2.7%) 갈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남녀 갈등은 20대에서 47.5%로 1위였고 30대에서도 26.4%로 2위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젊은층이 많은 학생(58.0%)에서,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6.2%)에서 남녀 갈등을 많이 뽑았다. 반면 60대(1.1%)와 70대 이상(0.4%)은 모든 사회갈등 영역 중 남녀 갈등을 가장 적게 선택했다. 또한 여성(13.0%)보다 남성(16.9%)이 남녀 갈등을 많이 골랐다.

빈부 갈등을 선택한 비율은 40대(45.5%)에서 특히 높았다. 하위 계층(33.9%)보다 중간 계층(34.3%), 상위 계층(37.5%)에서 빈부 갈등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특징도 보였다.

정치 갈등을 뽑은 사람은 60대(35.7%)와 50대(31.0%)에서 많았다. 30대(11.1%)와 20대(12.6%)에서는 정치 갈등이 3위에 그쳤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2021.10.6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0061640001#csidx2e79e1e44cfb1f080d74711873cd08d>

2. 정책 영역별 변화들...

1) 주류화 지표 및 과제 중 조직 중심 접근이 최선인가?

-> 전담부서 및 조직강화

-> 성평등관련 기관의 다양화, 전문화 등 기관 신설과 기능 강화

-> NGO 역량 강화

2) 성별, 연령 지표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 발굴이 필요

- > 여성의 건강권 확대보다는 성별 특성기반 맞춤형 건강권 확대방안 \ (재래문화, 음주문화, 노동문화 등)
채색 식단강화 방안, 발농사 및 과수농사 유형... 건강관리 문제
- > 승용차 일상화로 도보환경 / 산책 환경의 열악함...
(초, 중, 고학생 등하교 패턴 연구... 건강권과 관계)
(안전한 마을 산책환경 / 조명이나 야생동물관리 등...)
(주차장면적 확대 / 놀이터 공간 축소/ 적절한 타협점??)
- > 생활환경에 기반한 안전한 환경 조성
- > 아동친화, 여성친화, 어르신 공간 구성을 위한 도시계획 방안
(놀이터 모니터링, 학교보행길 동선 모니터링, 경로당 이용시설 모니터링..)

3) 젠더, 세대 갈등 상황을 맞는 토론 문화 및 조정 능력 강화

- > 여성의 안전권 강화 / 화 다스리기 / 토론문화 재정립
- > 폭력의 악순환, 범죄의 잔혹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가?

4) 다양한 가족, 돌봄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 > 수놓음돌봄센터의 운영 성과 필요 / 마을기반 돌봄체계 어려움
- > 기존 돌봄시스템과의 긴장해소와 상생방안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작은도서관....)
- > 업종별, 산업별 돌봄지원체계 필요 /
- > 이용자 중심의 돌봄운영 체계의 구체적 모델 제시 필요

3. 새로운 전환의 시대 반영한 젠더 이슈

- => 계속 “여성”을 별도 카테고리로 갖고 갈 것인가?
- => 성평등 전환 사회에 대한 포괄성과 집중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 / 제주형 여성일자리 확대??

제주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디지털,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 사회적 전환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성별적 태도가 다른지... 그렇다면 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격차해소는?

과대 성별 직업군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디서 오는 차이인가?

=> 에너지 전환부분, 환경분야에서 젠더 불균형은 없는지...

=> 인력수급의 불일치 / 현장에서의 인력난/

=> 고령사회에서의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 필요

메 모

메 모

메 모

메 모